

한눈에 보는 정답

THEME 01 정치와 법
수능 실전 문제 본문 5~9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⑤
05 ④	06 ①	07 ②	08 ①
09 ②	10 ④		

THEME 0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1~14쪽

01 ③	02 ④	03 ①	04 ①
05 ②	06 ③	07 ⑤	08 ④

THEME 0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6~20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②
05 ④	06 ④	07 ①	08 ②
09 ④	10 ②		

THEME 04 정부 형태
수능 실전 문제 본문 22~26쪽

01 ①	02 ②	03 ④	04 ⑤
05 ③	06 ④	07 ①	08 ④
09 ④	10 ⑤		

THEME 05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수능 실전 문제 본문 28~33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①
05 ②	06 ⑤	07 ③	08 ②
09 ②	10 ④	11 ④	12 ②

THEME 06 지방 자치
수능 실전 문제 본문 35~36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④
------	------	------	------

THEME 07 선거와 선거 제도
수능 실전 문제 본문 38~43쪽

01 ①	02 ②	03 ②	04 ③
05 ②	06 ②	07 ④	08 ②
09 ③	10 ⑤	11 ⑤	12 ⑤

THEME 08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수능 실전 문제 본문 45~49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③
05 ③	06 ②	07 ①	08 ④
09 ④	10 ⑤		

THEME 09 민법의 기초
수능 실전 문제 본문 51~53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④
05 ④	06 ②		

THEME 10 재산 관계와 법
수능 실전 문제 본문 55~60쪽

01 ②	02 ②	03 ①	04 ⑤
05 ⑤	06 ④	07 ②	08 ⑤
09 ⑤	10 ③	11 ①	12 ②

THEME 11 가족 관계와 법
수능 실전 문제 본문 62~67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③
05 ②	06 ③	07 ①	08 ②
09 ①	10 ⑤	11 ②	12 ⑤

THEME 12 형법의 이해
수능 실전 문제 본문 69~74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④
05 ④	06 ③	07 ②	08 ⑤
09 ⑤	10 ⑤	11 ⑤	12 ④

THEME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수능 실전 문제 본문 76~81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④	06 ④	07 ⑤	08 ②
09 ③	10 ③	11 ④	12 ④

THEME 14 근로자의 권리
수능 실전 문제 본문 83~87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③
05 ①	06 ③	07 ①	08 ③
09 ⑤	10 ③		

THEME 15 국제 관계와 국제법
수능 실전 문제 본문 89~92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③
05 ③	06 ①	07 ①	08 ③

THEME 16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수능 실전 문제 본문 94~97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②
05 ⑤	06 ①	07 ①	08 ④

실전 모의고사 1회 본문 100~105쪽

1 ②	2 ①	3 ③	4 ①	5 ③
6 ①	7 ④	8 ④	9 ④	10 ⑤
11 ⑤	12 ④	13 ②	14 ④	15 ④
16 ②	17 ③	18 ④	19 ②	20 ②

실전 모의고사 2회 본문 106~111쪽

1 ⑤	2 ④	3 ①	4 ③	5 ④
6 ④	7 ④	8 ①	9 ⑤	10 ②
11 ④	12 ①	13 ④	14 ②	15 ②
16 ④	17 ③	18 ⑤	19 ②	20 ④

실전 모의고사 3회 본문 112~116쪽

1 ④	2 ②	3 ②	4 ⑤	5 ②
6 ④	7 ③	8 ⑤	9 ①	10 ③
11 ①	12 ④	13 ④	14 ⑤	15 ④
16 ③	17 ④	18 ③	19 ①	20 ③

실전 모의고사 4회 본문 117~122쪽

1 ②	2 ⑤	3 ③	4 ①	5 ④
6 ①	7 ④	8 ④	9 ①	10 ⑤
11 ⑤	12 ⑤	13 ⑤	14 ⑤	15 ④
16 ⑤	17 ④	18 ⑤	19 ①	20 ④

실전 모의고사 5회 본문 123~128쪽

1 ③	2 ⑤	3 ⑤	4 ④	5 ③
6 ④	7 ④	8 ④	9 ①	10 ⑤
11 ②	12 ③	13 ③	14 ④	15 ④
16 ⑤	17 ②	18 ③	19 ⑤	20 ③

01 정치와 법

수능 실전 문제

본문 5~9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⑤
05 ④	06 ①	07 ②	08 ①
09 ②	10 ④		

0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이해

문제분석 같은 기업 내 노사 간의 갈등 해결 과정이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정치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같은 관점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같은 정치를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으로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와 관련된 활동으로만 보고 있다. 따라서 같은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③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

오답짜기 ① 소수의 통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②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④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⑤ 학교 구성원이 모여 교칙 변경을 논의하는 것을 정치라고 보는 것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02 정치의 기능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은 공동생활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처리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정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답찾기 ④ 사람들이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공동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처리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는 내용에서 이해관계의 갈등 조정과 해결을 통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정치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짜기 ① 사회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제시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② 특정 집단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제시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③ 국가가 가지는 강제력을 제한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제시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⑤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제시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03 법의 이념 이해

문제분석 법의 이념인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같은 평균적 정의, 같은 배분적 정의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찾기 ㄱ. 같은 절대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평균적 정의를 설명하였고, 같은 상대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배분적 정의를 설명하였다.

ㄴ. 모든 유권자에게 1인 1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평균적 정의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ㄷ. 시각 장애 수험생에게 일반 수험생보다 시험 시간을 일정 비율 더 부여하는 것은 배분적 정의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오답짜기 ㄹ.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배분적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04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이해

문제분석 A는 현대 민주 정치, B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C는 근대 민주 정치이다.

정답찾기 ㄷ.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입헌주의 원리에 근거한 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ㄹ. 현대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는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는 직접 민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오답짜기 ㄱ.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는 공정한 공직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첨제와 운번제를 실시하였다.

ㄴ.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는 여성, 노예, 외국인을 제외한 성인 남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05 사회 계약설의 이해

문제분석 같은 로크, 같은 홉스이다.

정답찾기 ㄴ. 홉스는 사회 계약을 통하여 통치자에게 주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로크, 홉스는 모두 국가를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오답짜기 ㄱ. 일반 의지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본 것은 루소이다.

ㄷ. 로크는 국가 권력의 분립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06 법치주의의 이해

문제분석 법치주의에 대한 같은 관점은 실질적 법치주의, 같은 관점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①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의 취지에 맞는 법률 제정 및 시행을 강조하는 위헌 법률 심사제 도입을 옹호한다.

오답짜기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도 중시한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기본권 제한 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⑤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법에 근거하지 않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통치를 부정한다.

07 정치의 의미 이해

문제분석 A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B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은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이고, ㉡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만 해당하는 사례이다.

정답찾기 ②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정치로 보므로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오답짜하기 ① A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③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국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본다.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소수 엘리트에 의한 통치 활동을 정치로 본다.

⑤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규칙을 정하는 활동을 정치로 본다.

08 법치주의의 이해

문제분석 자료에 제시된 독일의 수권법(授權法) 일부 조항은 법의 목적과 내용에 상관없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형식적 법치주의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①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은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오답짜하기 ②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③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국가 권력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④ 법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이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09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찾기 갑. 법이 독재자의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정.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 권력 행사의 법적 근거를 중시한다.

오답짜하기 을. 부당한 국가 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합법적이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병. 법 제정 절차가 합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이 실질적 정치에 부합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10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최고 이념을 목적으로 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작동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는 글이다.

정답찾기 ④ 제시문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오답짜하기 ①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일부 제한하면서 사회 질서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내용은 제시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② 제시문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

③ 제시문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최고 이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는 내용은 제시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수능 감(感)잡기

감을 잡으면 수능이 두렵지 않다!
내신에서 수능으로 연결되는
포인트를 잡는 학습 전략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1~14쪽

01 ③

02 ④

03 ①

04 ①

05 ②

06 ③

07 ⑤

08 ④

01 헌법 의미의 변천 이해

문제분석 A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 B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 C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정답찾기 ③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오답짜르기 ① 복지 국가의 이념을 반영한 것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②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④ 국가 통치 기관 조직·구성에 관한 규정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 국가 헌법 모두에 포함되어 있다.

⑤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중시하는 것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02 헌법의 기능 이해

문제분석 헌법은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각 기관이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정답찾기 ④ 제시문을 통해 헌법이 국가 통치 조직에 권한을 부여하고 각 조직의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짜르기 ① 국민적 합의의 도출로 다원화된 이익을 조정하는 내용은 제시문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② 사회 통합의 매개체가 되어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내용은 제시문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③ 정치적 의사 결정의 기준을 제공하여 정치 생활을 주도하는 내용은 제시문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⑤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제시문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03 국민 주권주의의 이해

문제분석 국민 투표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주의임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① 국민 주권주의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의 근거가 되는 원리이다.

오답짜르기 ②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이다.

③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다.

④ 문화 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⑤ 평화 통일 지향은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의 근거가 되는 원리이다.

0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가)는 국제 평화주의, (나)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A에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이 들어갈 수 있고, B에 문화 국가의 원리의 실현 방안이 들어갈 수 있다.

정답찾기 ①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오답짜르기 ②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③ 국가에 의하여 국민의 문화 활동이 보호·지원되어야 한다는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④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 중 하나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들 수 있다.

⑤ 권력 분립 제도와 사법권의 독립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05 복지 국가의 원리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노후 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지원 관련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복지 국가의 원리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② 사회권을 보장하는 데 근거가 되는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오답짜르기 ①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 강조된 원리이다.

③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④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⑤ 국가가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06 국제 평화주의의 이해

문제분석 정부의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참여를 통해 (가)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제 평화주의임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나. 외국에 대한 공격 원조 제공은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리. 국가가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오답짜르기 기. 모든 유형의 전쟁 부인이 아니라 침략적 전쟁 부인이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07 평화 통일 지향의 이해

문제분석 헌법 제4조, 제66조 제3항, 제92조 제1항을 통해 A는 우리

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평화 통일 지향임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⑤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평화 통일 지향을 실현하는 방안이다.

오답피하기 ① 근로자의 적정 임금 보장은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② 의무 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평생 교육을 진흥하는 것은 문화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③ 보통 선거제를 실시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④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08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갑은 국민 주권주의, 을과 정은 문화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따라서 A는 문화 국가의 원리, B는 국민 주권주의이며, (가)에는 문화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이 들어갈 수 있다.

정답찾기 ㄱ. 국가가 개인의 문화적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ㄴ.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ㄷ. 의무 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평생 교육을 진흥하는 것은 문화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오답피하기 ㄷ.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민주적인 선거 제도의 보장을 들 수 있다.

THEME 0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6~20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②
05 ④	06 ④	07 ①	08 ②
09 ④	10 ②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의 이해

문제분석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로 모든 기본권에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이다. 행복 추구권은 물질적·정신적으로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찾기 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다른 모든 기본권에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이다.

ㄷ. 행복 추구권은 인간이 행복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인 성격의 권리이다.

ㄹ. 행복 추구권은 물질적·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답피하기 ㄱ.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02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A의 내용인 환경권, 보건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통하여 A는 사회권임을 알 수 있으며, B의 내용인 구속 적부 심사제,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통하여 B는 자유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에는 사회권의 내용이, (나)에는 자유권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찾기 ② 사회권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오답피하기 ① 실질적 평등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③ 자유권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며, 사회권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④ 근로의 권리는 사회권의 내용에 해당한다.

⑤ 적법 절차의 원리는 자유권의 내용에 해당한다.

03 참정권의 이해

문제분석 (가)는 참정권이며, A는 선거권, B는 국민 투표권, C는 공무 담임권이다.

정답찾기 ③ 선거권, 국민 투표권, 공무 담임권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②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④ 선거권은 대의제를 실현하는 권리이다.

⑤ 국민 투표권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권리이다.

04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은 청구권이고,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와 근로 3권을 내용으로 들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따라서 A는 청구권, B는 사회권이며, (가)에는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다.

- 정답찾기** ㄱ. 사회권은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ㄴ.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오답피하기 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ㄷ. 청원권, 형사 보상 청구권은 청구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05 평등권의 이해

문제분석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라는 내용과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통해 A는 평등권임을 알 수 있다.

- 정답찾기** ④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답피하기 ①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사회 불평등의 심화로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②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③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⑤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이다.

06 기본권 유형의 이해

- 문제분석** (가)는 자유권, (나)는 참정권, (다)는 청구권이다.
정답찾기 ㄱ. 자유권은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ㄴ. 참정권은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ㄷ. 청구권은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오답피하기 ㄴ. 참정권과 청구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07 자유권의 이해

- 문제분석**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므로 (가)는 자유권임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ㄱ.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ㄴ.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오답피하기 ㄷ.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ㄴ.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가지는 권리는 청구권이다.

08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과 사회권이므로 C는 자유권임을 알 수 있다.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사회권이므로 B는 사회권이다. 따라서 A는 청구권이다.

- 정답찾기** ② 청구권에 재판 청구권이 포함된다.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자유권에 사회적·경제적 자유가 포함된다. 청구권과 사회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을이다.

09 청구권의 이해

문제분석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조항은 DNA 채취 대상자에게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 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절차마저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헌법 재판소가 청구인들의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결정하였으므로 (가)에 재판 청구권이 들어갈 수 있으며, (가)가 속하는 기본권 유형은 청구권이다.

- 정답찾기** ④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이고 절차적인 권리이다.
오답피하기 ① 청구권은 국가 성립을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②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③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⑤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해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10 기본권 제한과 한계의 이해

- 문제분석** 헌법 재판소는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조항이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답찾기 ㄱ. 헌법 재판소는 ○○ 법률 제△△조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인정되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ㄴ. ○○ 법률 제△△조에 대해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는 감에 대한 기본권 제한 방법이 목적달성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ㄷ. ○○ 법률 제△△조에 대해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는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더 크지 않다고 보았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22~26쪽

01 ①

02 ②

03 ④

04 ⑤

05 ③

06 ④

07 ①

08 ④

09 ④

10 ⑤

01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권력 분립이 완화되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의존의 원리에 의하여 규율되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며, 권력 분립이 엄격하여 상호 독립의 원리 및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따라서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정답찾기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에 대하여 총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다.

오답피하기 ② 내각이 연대하여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③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탄핵 소추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④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경우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연립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⑤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02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행정부 수반을 국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므로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정답찾기 ㄱ.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ㄴ. (가)에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공통된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모두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오답피하기 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므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원화되어 있다.

ㄷ. (나)에는 의원 내각제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03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교사의 평가 중 A, B의 특징은 서로 반대로 작성하였는데, 학생이 받은 점수가 총 4점이라는 것은 관련 헌법 조문은 모두 제대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하며, 대통령을 국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정답찾기 ④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하여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내각은 연대하여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②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통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구분되지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⑤ 행정부와 입법부 간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04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A, B의 특징을 서로 반대로 작성하였으므로 (가)에는 대통령제의 특징이 들어가야 하고, (나)에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다)에는 우리나라 헌법 조문 중 의원 내각제 요소와 관련된 헌법 조문이 들어가야 하고, (라)에는 대통령제 요소와 관련된 헌법 조문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찾기 ㄱ.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내각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ㄷ.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 행사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한다.

05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으면, 정부 형태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③ ㉠이 '55'이면, B당의 의회 의석률은 15%이다. 따라서 T+1 시기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며,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T 시기 A당의 의회 의석률이 52%이므로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A당이 된다.

오답피하기 ① ㉠이 'C당'이면,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T+1 시기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서 선출되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② ㉠이 'C당'이면,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T+1 시기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④ ㉠이 '55'이면, T+1 시기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내각의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달려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⑤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갖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T+1 시기 A당의 의석률이 50%를 초과한다면 A당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B당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은 50을 초과할 수 없다.

06 대통령제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행정부 수반을 국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므로 A는 대통령제이다.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며, 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내각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고,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책의 계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가)의 내용이 대통령제이면 (나)는 3명이고, (가)의 내용이 의원 내각제이면 (나)는 2명이다.

정답찾기 ④ (나)에 '2명'이 들어가면, (가)에 대통령제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인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므로 해당 진술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나)에는 '2명' 또는 '3명'이 들어갈 수 있다.

②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③ 대통령제는 행정부 수반을 국민의 선거로 선출하므로 연립 내각이 구성되지 않는다.

⑤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따라서 (가)에 해당 진술이 들어가면, (나)에 '3명'이 들어간다.

07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갑국은 국민의 선거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였으며, 을국은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였다. 따라서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정답찾기 ①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엄격한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이며, 의원 내각제는 의회와 내각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이다.

오답피하기 ②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국가 원수가 국정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④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 못한 경우에는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된다.

08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므로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정답찾기 나. 대통령제에서 법률안 제출은 의회 의원만 할 수 있다. 르. 내각이 연대하여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해당 질문에 대한 B의 답변은 '아니요'이다. B에 대한 답변으로 맞은 개수가 2개이므로 ㉠에는 옳지 않은 답변이 들어가야 한다.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견직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 ㉡은 모두 '예'이다.

오답피하기 가.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다. (가)에는 의원 내각제만 '예'라고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09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은 대통령제의 요소에 해당하며, 행정부에 국무총리가 존재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요소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④ ㉠이 3점이면,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의 요소이다.

오답피하기 ① A가 대통령제, B가 의원 내각제이면, ㉠, ㉡은 각각 1점이며, A가 의원 내각제, B가 대통령제이면, ㉠, ㉡은 각각 0점이다. 따라서 ㉠, ㉡의 점수는 같다.

② 국회 의원이 국무 위원을 겸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요소에 해당하므로 B는 의원 내각제가 된다. 따라서 ㉠, ㉡은 각각 1점이므로 ㉢은 3점이 된다.

③ ㉠이 1점이면,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⑤ ㉠이 3점이면,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것은 대통령제의 요소이므로 해당 진술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10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을 국민의 선거로 선출하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선출하므로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며, 병국과 정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갑국은 여대야소, 을국은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되었으며, 병국은 의회 제1당 단독으로 내각이 구성될 수 있으며, 정국은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다.

정답찾기 ⑤ 갑국과 을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므로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② 병국은 의회 제1당이 단독으로 내각이 구성될 수 있으며, 정국은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으므로 병국이 정국보다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가능성이 낮다.

③ 정국은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다.

④ 내각도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28~33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①
05 ②	06 ⑤	07 ③	08 ②
09 ②	10 ④	11 ④	12 ②

01 헌법 개정안 및 법률 제·개정 절차 이해

문제분석 A는 법률 제·개정안, B는 헌법 개정안이다.

정답찾기 ㄱ. 법률 제·개정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오답피하기 ㄴ. 재의 요구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ㄷ.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모두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가 제출한 법률안과 국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모두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02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권한 이해

문제분석 A는 대법원, B는 대통령, C는 헌법 재판소이다.

정답찾기 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가 되면 헌법 재판소가 이를 심판한다.

오답피하기 ①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할 수 없다.

②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재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③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국회는 대법원장과 헌법 재판소장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03 법원의 권한 및 심급 제도 이해

문제분석 제1심을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면 A 법원은 지방 법원 합의부이며, 제1심을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면 A 법원은 고등 법원이다. B 법원은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다.

정답찾기 ㄴ. 모든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갖는다.

ㄷ.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오답피하기 ㄱ. 제1심을 지방 법원 단독 판사에서 담당하면, 제2심(㉠)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ㄴ.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04 국회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국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집회되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

정답찾기 ①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로 집회된다.

오답피하기 ② 국회 내에서 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위원회이다. 교섭 단체는 국회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체로서 국회 의사 진행에 필요한 안건을 협의한다.

③ 본회의에서 회의는 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법률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며, 재의 요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05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 이해

문제분석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교사가 B의 권한에 대해서는 모두 옳게 작성하였다고 평가하였으므로 B는 국회이다. 따라서 A는 대통령이다.

정답찾기 ㄱ.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ㄴ. (가)와 (나) 중 하나에만 대통령의 권한이 들어가야 하므로 (가)에 국회의 권한인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권'이 들어가면, (나)에 대통령의 권한인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이 들어갈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과 국회 모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ㄷ.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다)에 들어갈 수 있다.

06 국가 기관 간의 견제 관계 이해

문제분석 표는 국회, 대통령, 법원 간의 상호 견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바)에 들어가는 견제 권한에 따라 A~C가 달라질 수 있다.

정답찾기 ⑤ (나)에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이 들어가면, A는 국회, C는 대통령이므로 B는 법원이다. 따라서 (다)에는 법원의 국회에 대한 견제 권한이 들어가야 하므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 들어갈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A가 국회, C가 대통령이면 B는 법원이므로 (바)에는 대통령의 법원에 대한 견제 권한이 들어가야 한다. '명령·규칙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은 법원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 권한이다.

② B가 국회, C가 법원이면 A는 대통령이므로 (바)에는 법원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 권한이 들어가야 한다. 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등의 효과가 있으며, 그 권한은

대통령이 가진다. 따라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법원에 대한 견제 권한이다.

③ (가)에 '대법원장 임명권'이 들어가면, A는 대통령, B는 법원이므로 C는 국회이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감사원이다.

④ (라)에 '법률안 거부권'이 들어가면, B는 대통령, C는 국회이므로 A는 법원이다. 법원이 국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07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내용은 헌법 재판소법 중 일부이며, 제41조는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에 관한 조항이고, 제68조는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사유에 관한 조항이다.

정답찾기 ③ 법률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는 헌법 재판소이다.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고,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④ 위헌 법률 심판 결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당사자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08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분석 청구인은 사전 선거 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정답찾기 ㄱ. 과잉 금지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ㄴ. ㉡은 청구인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청구한 것이므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오답피하기 ㄴ. 1심 재판이 지방 법원 지원 단독 판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졌고, 1심 재판이 지방 법원 지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은 고등 법원에서 이루어졌다. ㉡은 상고심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에서 이루어졌다.

ㄷ. 청구인은 해당 법률 조항 중 '그 밖의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이 선거 운동의 자유, 즉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09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권한 이해

문제분석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A만 갖고 있으므로 A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은 대법원이다. 국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인데, 해당 질문으로 A, D와 B, C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D는 감사원이며, B와 C는 각각 국회와 대통령 중 하나이다.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갖는 것은 국회이므로 B는 국회이다. 따라서 C는 대통령이다. 국회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되므로 (가)에 들어갈 질문에 국회의 답변은 '예'가 되어야 한다.

정답찾기 ② 국회 의장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대법원장, 대통령, 감사원장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다.

오답피하기 ① 국민 투표 부의권을 갖는 것은 대통령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③ 조약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이 가지며, 대통령의 주요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가 가진다.

④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 의장은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며,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0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분석 (가)는 탄핵 심판, (나)는 정당 해산 심판이므로 A는 헌법 재판소이다.

정답찾기 ④ ㉠은 대한민국 정부이며,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모든 공무원이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 등 헌법에 규정된 공직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대상이 된다.

② ㉠은 국회이다.

③ 국가 기관 간의 권한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는 심판은 권한 쟁의 심판이다.

⑤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11 법률 제·개정 절차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찾기 ④ 재의 요구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오답피하기 ① 국회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②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하나의 정당으로 이루어진 기관은 교섭 단체이다.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에 속하는 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③ 법률안 거부권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한다.

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므로 환부 거부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결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과 관련이 없다.

12 국무 회의와 감사원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A는 국무 회의, B는 감사원이다.

정답찾기 가. 국무 회의는 행정부 내 최고의 심의 기관이다.
 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등을 담당한다.
오답짜르기 나. 국무 회의의 의결은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르. 국무 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감사원장은 국무 위원이 아니므로 국무 회의의 구성원이 되지 않는다.

THEME
06 지방 자치

수능 실전 문제		본문 35~36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④

01 지방 자치의 의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은 중앙 정부가 홀로 통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차단하고 각 지역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실히 고려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의 역할을 지방 정부가 일정 부분 나누어 맡고 상호 견제하는 지방 자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찾기 가. 각 지역과 관련된 일을 중앙 정부가 모두 결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이나 특수한 상황을 세심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권력을 나누어 맡고 상호 견제하는 것은 수직적 권력 분립에 해당한다.

오답짜르기 나.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로부터 이양받는 일정한 권력에 사법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르. 제시문은 지방 자치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 참여의 필요성이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력 분립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02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에는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가 있고,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에는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와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장이 있다.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따라서 A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정답찾기 ③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역구 지방 의회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답짜르기 ① 광역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기초 자치 단체에서도 지방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 정부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다.

④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이 아니라 집행 기관이다.

⑤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권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다.

03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을 통해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제도는 지방 자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고, 지방 자치 단체 합동 평가 제도는 중앙 정부가 지방 자치 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임을 파악할 수 있다.

수능특강 Light

수능 영어 대비를 Light 하게!
 수능특강을 풀기 전
 가볍고 부담 없이 시작하자

정답찾기 ⑤ 주민들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제도를 통해 해당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이나 방안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또한 중앙 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 합동 평가 제도를 통해 광역 자치 단체의 직무 수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권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다.

오답짜이기 ①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제도가 지방 의회 의사 결정의 신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지방 자치 단체 합동 평가 제도는 중앙 정부가 광역 자치 단체의 직무 수행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 간 견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제도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 수직적 권력 분립이 아니라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④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제도의 목적이다.

04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과제 이해

문제분석 각 모듬은 지방 자치에 주민이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답찾기 ④ 각 모듬이 발표한 방안은 지방 자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오답짜이기 ① 지역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갈등 해소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각 모듬이 발표한 방안이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지역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 향상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각 모듬이 발표한 방안이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지역 주민의 참여는 지방 자치의 민주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으나 각 모듬이 발표한 방안이 지방 자치 단체 기관 구성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각 모듬의 발표 내용은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으로서 주민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은 아니다.

THEME

07

선거와 선거 제도

수능 실전 문제

본문 38~43쪽

01 ①

02 ②

03 ②

04 ③

05 ②

06 ②

07 ④

08 ②

09 ③

10 ⑤

11 ⑤

12 ⑤

01 선거의 기능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은 링컨의 지지자들이 링컨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선거에서 재신임을 받았음을 언급한 사실을 통해 선거가 갖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찾기 ①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거쳐 구성된 정치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 제시문은 링컨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선거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짜이기 ② 국민은 선거 참여 과정에서 자신이 국가의 주권자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치 제도와 구조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의 기능은 제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③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집약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에 입각하여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의 기능은 제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④ 선거를 통해 정치 과정을 주도할 새로운 정치 엘리트가 충원될 수 있으나 제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⑤ 선거를 통해 사회적 쟁점의 발생 원인이나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으나 제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02 민주 선거의 원칙 이해

문제분석 갑은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이라면 재산, 학력, 집안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을은 선거 시 유권자의 의사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찾기 ② 민주 선거의 원칙 중 갑은 보통 선거, 을은 비밀 선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보통 선거는 재산, 학력, 성별,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이고, 비밀 선거는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에 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답짜이기 ①, ③, ④, ⑤ 민주 선거의 원칙 중 평등 선거는 유권자에게 부여하는 표의 수와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직접 선거는 유권자가 대리인(중간 선거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03 선거 제도의 영향 이해

문제분석 비례 대표제를 폐지하고 단순 다수 대표제와 결합된 소선

EBS

거구제를 시행할 경우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만 당선되므로 만약 유권자들이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되면 군소 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거대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정답찾기 ② 변경된 제도하에서 유권자들이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되면 거대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양당제 형성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오답짜하기 ① 선거의 공정성은 전반적인 선거 제도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서, 단순 다수 대표제와 결합된 소선거구제를 시행할 경우 심리적 효과에 의한 전략적 투표 가능성으로 인해 높아질 수 있는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③ 변경된 제도하에서 유권자들이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되면 군소 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의회 내 이념적 다양성은 낮아질 수 있다.

④ 소선거구제는 선거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은 단순 다수 대표제와 결합된 소선거구제를 시행할 경우 심리적 효과에 의한 전략적 투표 가능성으로 인해 높아질 수 있는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⑤ 선거구 간 유권자 표의 등가성은 각 선거구 유권자 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단순 다수 대표제와 결합된 소선거구제를 시행할 경우 심리적 효과에 의한 전략적 투표 가능성으로 인해 높아질 수 있는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04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법률 조항들은 공직 선거법의 일부이다. 제시된 첫 번째 조항은 방송 연설을 통한 선거 운동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 조항은 선거 비용의 보전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찾기 ③ 선거 운동의 제한이나 선거 비용의 보전을 규정한 조항들은 공통적으로 후보자들이 경제적 능력 등에 상관없이 선거 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오답짜하기 ① 케리맨더링은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임의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방지하는 것은 선거구 법정주의의 취지에 해당한다.

② 선거 운동의 제한이나 선거 비용의 보전이 투표 참여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것은 선거구 간 인구 편차나 선거구제의 종류와 관련되므로 제시된 조항들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⑤ 제시된 두 번째 조항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의 전액을 보전한다는 내용은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두 조항의 내용으로부터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에 따른 정치적 혼란 방지라는 취지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05 민주 선거의 원칙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은 해의를 향해하는 선박에 장기 체류하는 우리나라 선원들의 선거권 행사에 관한 헌법 소원 심판 결정문의 일부이다. 헌

법 재판소는 전자 통신 장비를 이용한 선상 투표 결과 그 내용이 일부 노출되어 비밀 선거에 저촉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선상 투표 방법을 마련하여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 선원들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보통 선거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은 비밀 선거, ㉡은 보통 선거이다.

정답찾기 ㉠. 비밀 선거는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에 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공개 선거에 반대되는 원칙이다.

㉡. 보통 선거는 재산, 학력, 성별,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이다.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이념을 기반으로 한 시민 혁명 이후에도 여러 국가에서 여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들이 힘든 노력 끝에 선거권을 획득하면서 보통 선거가 확립되었다.

오답짜하기 ㉢. 인종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밀 선거가 아니라 보통 선거에 위배된다.

㉣. 유권자에게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은 보통 선거가 아니라 평등 선거이다.

06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공직 선거법에는 대통령, 국회 의원,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출에 관한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정답찾기 ② 국회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과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국회 의원 선거의 전체 선거구 수는 지역구 국회 의원 정수(定數)에 1을 더한 수이다.

오답짜하기 ① 대통령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단순 다수 대표제이다.

③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서 비례 대표제는 광역 의회 의원 선거와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 모두 도입되어 있다.

④ 지역구 지방 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제로 광역 의회 의원 선거에는 소선거구제가,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있다.

⑤ 국회 의원 선거와 지방 의회 의원 선거는 4년마다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실시한다.

07 대표 결정 방식의 이해

문제분석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표 결정 방식으로 현행 제도는 단순 다수 대표제, <1안>은 절대다수 대표제 중 하나인 결선 투표제, <2안>은 절대다수 대표제 중 하나인 선호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찾기 ㉢. 선호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2안>은 1차 집계 시 1순위표 최다 득표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1순위표 최소 득표자를 탈락시키며 정해진 방식대로 1순위표 과반 득표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집계를 반복한다. 따라서 <2안>은 득표수에 상관없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현행 제도에 비해 투표 집계 과정이 복잡하다.

㉣. <1안>과 <2안> 모두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을 득표해야만 당선될 수 있으므로 득표수에 상관없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적합하다.

○답짜기 ㄱ. <1안>은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투표를 한 번 더 실시해야 하므로 득표수에 상관없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당선자 결정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데 적합하지 않다.

ㄷ. <1안>을 적용하더라도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을 획득한 후보자가 나오면 2차 투표 없이 당선자가 결정된다.

08 선거 결과 추론

문제분석 유권자 유형별 정당 선호 순위를 근거로 현행 제도, <1안>, <2안>을 적용한 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행 제도 적용 시 - 최다 득표한 A당 후보자 당선

구분	A당	B당	C당	D당
득표율(%)	40	30	20	10

• <1안> 적용 시

(1) 1차 투표 -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획득 후보자 없음.

구분	A당	B당	C당	D당
득표율(%)	40	30	20	10

(2) 2차 투표 -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을 획득한 A당 후보자 당선

구분	A당	B당
득표율(%)	60	40

• <2안> 적용 시

(1) 1차 집계 -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획득 후보자 없음.

구분	A당	B당	C당	D당
득표율(%)	40	30	20	10

(2) 2차 집계 -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획득 후보자 없음.

구분	A당	B당	C당
득표율(%)	50	30	20

(3) 3차 집계 -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을 획득한 A당 후보자 당선

구분	A당	B당
득표율(%)	60	40

정답찾기 ② <1안>과 <2안>을 적용할 경우 당선자 득표율은 모두 60%이다.

○답짜기 ① 현행 제도, <1안>, <2안> 중 어떤 안을 적용하더라도 당선자는 A당 후보자이다.

③ <1안>과 <2안>을 적용할 경우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사표의 수는 같다.

④ <1안>과 <2안>을 적용할 경우 대표 결정 방식에 따라 (마) 유형 유권자의 표는 두 번째로 선호하는 A당 후보자의 당선에 기여하게 된다.

⑤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에서 여대야소의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당별 의석수가 필요한데, 제시된 자료에는 정당별 의석수가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판단이 불가능하다.

09 선거구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현행 제도는 소선거구제, 개편하려는 <1안>과 <2안>은 모두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찾기 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같은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가 여러 명 나오는데, 당선자 간 득표율의 차이로 인해 선거구 내 당선자 간 유권자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ㄷ.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답짜기 ㄱ.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구 제도이다.

ㄹ.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

10 선거 결과 분석 및 추론

문제분석 최근 실시된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그 결과를 기준으로 <1안>, <2안>을 적용한 차기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재 - A당 : B당 : C당 : D당 = 5 : 2 : 1 : 0

구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당선자 소속 정당	A당	A당	C당	A당	B당	A당	B당	A당

• 차기에 <1안> 적용 시 - A당 : B당 : C당 : D당 = 3 : 2 : 3 : 0

구분	(가)+(다)	(나)+(라)	(마)+(사)	(바)+(아)
당선자 소속 정당	B당, C당	A당, C당	A당, B당	A당, C당

• 차기에 <2안> 적용 시 - A당 : B당 : C당 : D당 = 3 : 4 : 1 : 0

구분	(가)+(나)	(다)+(라)	(마)+(바)	(사)+(아)
당선자 소속 정당	A당, B당	B당, C당	A당, B당	A당, B당

정답찾기 ⑤ 최근 실시된 의회 의원 선거에서 C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는 (다) 선거구를 제외하고 모든 선거구에서 사표가 되었다. 그러나 차기에 <1안>을 적용할 경우는 (가)+(다), (나)+(라), (바)+(아) 선거구에서 C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가 당선에 기여하게 되고, <2안>을 적용할 경우는 (다)+(라) 선거구에서 C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가 당선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1안>이나 <2안>으로 개편하여 차기 의회 의원 선거를 치를 경우 C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는 비율은 감소한다.

○답짜기 ①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의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현재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A당이다. <1안>으로 개편하여 차기 의회 의원 선거를 치르면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은 없게 되므로 어느 정당도 단독 내각을 구성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A당이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 수반을 배출할 수도 있으므로, <1안>으로 개편하여 차기 의회 의원 선거를 치를 경우 행정부 수반이 속한 정당이 현재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B당은 <1안>에 비해 <2안>으로 개편하는 것이 의석수 확보에 유리하다.

③ D당은 <1안>이나 <2안>으로 개편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다.

④ <1안>이나 <2안>으로 개편하더라도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의 수는 현재와 같이 3개이다.

11 선거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현재 제도는 의회 의원을 4개의 선거구마다 단순 다수 대표제로 2명씩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개편안은 4개의 선거구마다 단순 다수 대표제로 의회 의원을 1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4명의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비례 대표제를 함께 채택하고 있다.

정답찾기 ⑤ 비례 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할당하고 당선자를 결정하므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을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오답짜기 ①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할당하고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단순 다수 대표제로 1명을 선출하는 방식에 비해 당선자 결정 절차가 복잡하여 당선자 결정이 용이하지 않다.

② 지지하는 후보자에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보다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용이하다.

③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할당하고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 대표제가 군소 정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하다.

④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비례 대표제가 지역 대표로서 당선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12 선거 결과 분석 및 추론

문제분석 최근 실시된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그 결과를 기준으로 개편안을 적용한 차기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재

구분	A당	B당	C당	D당
제1선거구	당선	-	당선	-
제2선거구	당선	당선	-	-
제3선거구	당선	당선	-	-
제4선거구	당선	당선	-	-
총의석수(석)	4	3	1	0
의석률(%)	50	37.5	12.5	0
득표수(표)	320	200	150	130
득표율(%)	40	25	18.75	16.25

• 차기에 개편안 적용 시

구분	A당	B당	C당	D당
제1선거구	당선	-	-	-
제2선거구	당선	-	-	-
제3선거구	-	당선	-	-
제4선거구	당선	-	-	-
지역구 의석수(석)	3	1	0	0
득표수(표)	320	200	150	130
득표율(%)	40	25	18.75	16.25
득표율×비례 대표 총의석수(4)	1.6	1	0.75	0.65
비례 대표 의석수(석)	1	1	1	1
총의석수(석)	4	2	1	1
의석률(%)	50	25	12.5	12.5

정답찾기 ⑤ 현재 과대 대표된 정당은 A당, B당 2개이고,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과대 대표되는 정당은 A당 1개이다.

오답짜기 ① A당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현재 4석에서 3석으로 감소한다.

② B당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현재와 달리 정당 득표율과 의석이 일치하게 된다.

③ C당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현재와 같이 의석을 1석 확보할 수 있다.

④ 현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D당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1석을 확보할 수 있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45~49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③
05 ③	06 ②	07 ①	08 ④
09 ④	10 ⑤		

01 정치 과정의 이해

문제분석 정치 과정은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되어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며 정치 주체에 의한 평가 및 재투입 등 환류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A는 투입, B는 산출이다.

정답찾기 ②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정책에 대한 찬성뿐만 아니라 반대 의사 표출도 투입에 포함된다.

오답파악기 ① 정책 결정 기구에는 입법부와 행정부뿐만 아니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도 포함된다.

③ 정당은 정책 결정 기구가 아니므로 정당의 공천은 정책이 결정되거나 집행되는 산출의 사례로 볼 수 없다.

④ 민주화 정도가 높을수록 시민의 정치 참여 증가로 인해 정책 결정에 대한 요구나 지지, 즉 투입이 활발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주화 정도가 높을수록 투입에 비해 산출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없다.

⑤ 정치 과정의 투입과 산출 모두 경제, 문화, 사회, 생태 등 정치 외적 요소를 의미하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02 정치 참여에 대한 입장의 이해

문제분석 같은 시민의 정치 참여가 갖는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두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옹호하는 입장인 반면, 옳은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에 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정답찾기 나. 옳은 정치적으로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시민의 정치 참여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하였으므로 판단이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 정치 참여가 초래할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ㄷ. 같은 소수에 의한 지배보다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가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판단이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 정치 참여가 초래할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옳에 비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증진하는 제도 마련에 우호적일 것이다.

오답파악기 ㄱ. 같은 정치 참여가 갖는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시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가 정치적 효능감을 낮출 수 있다고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ㄹ.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감과 옳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를 반영하려는 시민의 능동적인 태도는 옳에 비해 감이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03 정치 참여 사례의 분석

문제분석 (가)는 투표를 통한 선거에의 참여, (나)는 가상 공간을 통한 참여, (다)는 시민 단체를 통한 참여 사례이다.

정답찾기 ④ (가), (나)는 개인적 정치 참여 유형, (다)는 집단적 정치 참여 유형에 속하는 방법이 활용된 사례이다.

오답파악기 ①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은 대의제의 기본 요소로서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지방 자치에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② (가), (나)에서 활용된 참여 방법은 모두 정책 결정 기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③ 가상 공간을 통한 정치 참여는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참여에 비해 시공간적 제약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⑤ 시민의 정치 참여 사례 (가)~(다)는 모두 정치 과정의 산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04 정치 참여의 의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에 따르면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하면서 사회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절차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도 함양하게 된다.

정답찾기 ③ 정치 사회화는 사회 구성원이 그 사회의 정치적 태도, 신념, 가치관, 규범, 행동 양식 등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제시문은 이러한 정치 사회화가 정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파악기 ① 정치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정치 참여의 의의로 볼 수 있으나 제시문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② 정치 참여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해소에 기여할 수도 있으나 이는 제시문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④ 정치 참여로 인해 정책 집행에 드는 비용이 감소할 수도 있으나 이는 제시문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⑤ 시민의 의사에 기반을 둔 정책 결정을 유도하는 것은 정치 참여의 의의로 볼 수 있으나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 참여의 의의는 정치 사회화 기회의 제공이 더 적절하다.

05 정치 참여 집단의 이해

문제분석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보다 공익의 실현을 우선시하는 것은 정당과 시민 단체이고, 자신의 활동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이다.

정답찾기 ③ ㉠에 들어갈 답변이 '예'라면, B는 정당과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그리고 ㉡, ㉢에 들어갈 답변이 다르다면, 정당은 A와 C 중 하나여야 하므로 B는 시민 단체이다.

오답파악기 ① ㉠~㉢에 들어갈 답변 중 '예'는 3개이다.

② A가 이익 집단이라면, ㉠에 들어갈 답변은 '예', ㉡에 들어갈 답변은 '아니요'이다.

④ ㉠, ㉡, ㉢에 들어갈 답변이 같다면, A는 이익 집단, B는 시민 단체, C는 정당이다.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당이다.

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06 정당 제도의 이해

문제분석 의회의 정당별 의석률을 통해 갑국의 정당 제도 유형은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두 정당이 존재하는 양당제, 을국의 정당 제도 유형은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는 다당제임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ㄱ. 다당제는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양당제에 비해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렵다.

ㄴ.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정책 결정에 관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오답짜기 ㄴ.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

ㄷ.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용이하다.

07 정치 참여 집단의 이해

문제분석 각 모둠의 발표 내용에 대해 교사가 1모둠은 적절하고 2모둠과 3모둠은 서로 맞바꾸면 좋겠다고 하였으므로 A는 정당, B는 이익 집단, C는 시민 단체이다.

정답찾기 ① 정당은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오답짜기 ② 비영리성은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③ 시민 단체는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이 아니라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④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정치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공통점이다.

08 정당을 통한 시민 참여의 이해

문제분석 공천을 위한 정당의 예비 선거에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갑은 긍정적 측면, 을은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정답찾기 ㄱ. 갑은 공천을 위한 정당의 예비 선거에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의 참여를 허용하게 되면 정당 내 실력자나 특정 파벌 집단에 의한 비민주적 정당 운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ㄷ. 의회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소홀해질 것으로 본 을과 달리 갑은 의회 의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의정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ㄴ.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갑과 달리 을은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현역 의회 의원에 비해 당내 정치 신인이 불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오답짜기 ㄴ. 을은 부정적 측면으로 당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두 가지 지적하였으나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09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이해

문제분석 2점을 획득한 을의 답안에서 첫 번째 내용은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중 시민 단체에만 해당하고, 두 번째 내용은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는 시민 단체이고, B는 이익 집단이며, (가)에는 둘 중 시민 단체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 가야 한다.

정답찾기 ㄴ. 노동조합은 이익 집단에 해당한다.

ㄴ. 시민 단체는 이익 집단과 달리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한다.

오답짜기 ㄱ. 갑의 답안에서 첫 번째 내용은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모두에 해당하지 않고, 두 번째 내용은 둘 중 이익 집단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 내용은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은 '0점'이다.

ㄷ.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10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의 과제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은 질문 내용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는 여론 조사의 특징을 설명하며 여론 조사 결과 보도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려는 언론을 대할 때 시민들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언급하고 있다.

정답찾기 ⑤ 제시문은 언론이 다양한 방법으로 특정 여론 형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 내용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의 비판적 수용 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짜기 ①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 여론의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제시문의 주장과 거리가 멀다.

② 언론과 정치권력이 결탁하면 특정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제시문이 언론과 정치권력의 결탁에 대한 감시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의 자유 보장은 제시문의 내용과 무관하다.

④ 제시문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시민들이 언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51~53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④

05 ④

06 ②

01 사법과 공법 이해

문제분석 국가 기관 및 국민의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A는 공법이고, 개인 상호 간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B는 사법이다. 민법은 사법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나. 공법은 국가 기관 및 국민의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와 그 구성원 사이의 통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에 포함된다.

르. 민법은 사적 법률관계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 모두 민법의 규율 대상이다.

오답피하기 가. 헌법과 형법은 모두 공법에 해당한다.

디.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은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등과 같은 사회법이다.

02 무과실 책임의 원칙 이해

문제분석 환경 정책 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정답찾기 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이다.

오답피하기 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② 사적 자치의 원칙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③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④ 계약 공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03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분석 갑, 병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카드와 해당 원칙이 수정·보완된 원칙 카드를 바르게 연결하였으므로 (가)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 (라)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을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과 수정·보완된 원칙의 순서를 바꿔서 연결했으므로 (나)는 계약 공정의 원칙, (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정답찾기 가. 제조물 제조상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르.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소유권에 공공의 개념을 적용하여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답피하기 나. 개인은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디.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

하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은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04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이해

문제분석 A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고, B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정답찾기 ④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소유권에 공공의 개념을 적용하여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이다.

오답피하기 ①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한 것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 수정·보완된 원칙이다.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②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가 지는 책임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 수정·보완된 원칙 중 하나인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③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05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이해

문제분석 민법은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할 뿐만 아니라 법의 일반 원칙을 제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2조에는 법의 일반 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정답찾기 가.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나. 농사를 짓기로 하고 농지를 매수한 후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며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농지를 매도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적법해 보이는 권리 행사도 사회성·공공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는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오답피하기 르.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법 적용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한 원칙은 근대 민법의 수정·보완 원칙으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이에 해당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모두 법의 일반 원칙이다.

06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 공정의 원칙 이해

문제분석 갑은 A와 B가 자율적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반면 을은 A와 B의 계약이 당사자의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면 (나)에 따라 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

다고 보고 있으므로 (나)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정답찾기 ②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의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오답짜야기 ①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③ 소유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국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④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한 계약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⑤ 계약 공정의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달리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을 수정·보완한 원칙이다.

THEME
10 재산 관계와 법

수능 실전 문제		본문 55~60쪽	
01 ②	02 ②	03 ①	04 ⑤
05 ⑤	06 ④	07 ②	08 ⑤
09 ⑤	10 ③	11 ①	12 ②

01 계약의 성립 이해

문제분석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해야 한다. 또한 계약이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계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해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정답찾기 ②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오답짜야기 ① A와 B 사이의 미술품 계약에서 미술품을 사겠다는 의사 표시는 청약이고, 미술품을 팔겠다는 의사 표시는 승낙이다.

③ 미성년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더라도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는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인식·판단함으로써 법률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은 의사 능력이다. 행위 능력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내지 자격을 의미한다.

⑤ 미성년자가 용돈의 범위를 초과하여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이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02 취소와 무효 이해

문제분석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법률 행위가 성립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무효이므로 (가)에는 무효에 해당하는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 일단 유효한 법률 행위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가 있으면 법률 행위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이므로 (나)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

정답찾기 ② 의사 능력이 결여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오답짜야기 ① 상대방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가 성년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다.

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수능개념

EBS 대표강사들과 함께 하는
수능의 개념을 잡아주는 필수 기본서

03 무효인 법률 행위 이해

문제분석 법원은 갑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원고의 채무에 관한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갑에게 자신의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적인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정답찾기 ① 법원은 갑에게 자신의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적인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는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본 것이며,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므로 법원은 해당 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오답파하기 ② 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적이고 불공정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강요와 협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하지만,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④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하지만,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⑤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나타나 있지 않다.

04 동물의 점유자 책임 이해

문제분석 사례에서 갑의 회사 직원 병이 배달 중에 개에게 물려 잔칫상을 을에게 배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잔칫상을 대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한편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무는 개의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진다. 단, 무가 개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정답찾기 ⑤ 무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인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개의 소유주인 정은 무의 불법 행위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파하기 ① 병이 을에게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갑은 을에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을은 갑과 잔칫상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병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③ 개의 소유주인 정이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무가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제시된 사례에서 동물의 소유자인 정과 동물의 점유자인 무가 공동으로 병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므로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05 특수 불법 행위 이해

문제분석 중간적 책임은 고의·과실의 증명 책임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게 전환한 것으로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중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의 배상 책임,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감독자 등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정답찾기 ㄴ. 친구 소유의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을이 개의 목줄을 놓쳐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자 을이 이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동물의 점유자 책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을이 개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ㄷ. 피자 가게의 창틀이 떨어져 행인이 다치자 상가를 임차하여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병이 이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병이 점유자로서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ㄹ. 치킨 가게 직원이 배달을 하던 중 부주의로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자 치킨 가게 사장 정이 이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이 직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오답파하기 ㄱ. 책임 능력이 있는 갑이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자 갑의 법정 대리인이 이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특수 불법 행위가 아니라 일반 불법 행위 책임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갑의 법정 대리인의 갑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06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이해

문제분석 책임 능력이 없는 갑(7세)이 을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갑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단, 갑의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정에게 상해를 입힌 병(17세)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병의 부모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찾기 ④ 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병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병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파하기 ① 갑에게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갑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갑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 을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갑의 부모가 갑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손해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③ 병에게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시된 사례만으로 갑과 갑의 부모, 병과 병의 부모가 각각 을, 정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갑에게는 책임 능력이 없어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질 수 없다.

07 계약의 의미와 효력 이해

문제분석 (가)에서 갑과 을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 펜션 이용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나)에서 A와 B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 케이크 주문 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며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손해 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찾기 ㄱ. 갑은 펜션 이용을 예약하고자 하는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하였고, 을은 예약일에 펜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 A는 케이크를 예약 주문하는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하였고, B는 예약일에 케이크를 배달하겠다는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

ㄷ. 케이크 주문 계약은 A와 B 사이에 체결되었다. 따라서 케이크가 배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 C가 아닌 B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오답찾기] ㄴ. 갑과 을의 계약으로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발생한다. 갑은 예약한 날짜에 펜션을 이용할 권리와 펜션 이용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모두 발생하므로 여행 당일 펜션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갑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ㄷ. A와 B가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08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이해

[문제분석] A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해당 건물의 창문이 떨어져 행인이 다친 경우 일차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질문자가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을 진다. 그런데 질문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고, 건물의 소유자인 A가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정답찾기] ⑤ 질문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질문자는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인 A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오답찾기] ① 질문자에게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질문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질문자가 건물의 점유자로서 일차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③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인데, 사례에서 건물의 소유자인 A와 점유자인 질문자가 공동으로 행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④ 질문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지만, 이 경우 A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09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 이해

[문제분석] 미성년자인 갑이 시계 판매업자 을로부터 손목시계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 대해 <상황 1>, <상황 2>, <상황 3>으로 구분하여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정답찾기] ⑤ <상황 1>에서 갑은 처분이 허락된 재산(용돈)의 범위 내에서 손목시계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상황 2>에서 갑은 용돈의 범위를 초과하여 손목시계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위조하여 을을 속였으므로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상황 3>에서 갑은 용돈의 범위를 초과하여 손목시계를 구매하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오답찾기] ① <상황 1>에서 갑은 처분이 허락된 용돈의 범위 내에서 손목시계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므로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상황 2>에서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위조하여 을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은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

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③ <상황 3>에서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은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해당 거래에 대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단, 계약 체결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상황 2>와 <상황 3>에서 모두 을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10 특수 불법 행위 이해

[문제분석] 갑이 아르바이트 중 손님 병에게 화상을 입힌 경우 갑을 고용한 을은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한편 정 소유의 건물을 무가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던 중 건물의 난간이 떨어져 갑이 다친 경우 무가 공작물 등의 점유자로 일차적 책임을 진다. 단, 무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건물의 소유자인 정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정답찾기] ㄴ. 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병은 갑을 고용한 을에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카페를 운영하던 무는 건물의 점유자로서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나 무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오답찾기] ㄱ.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은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인데, 사례에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병에게 화상을 입힌 것은 아니다.

ㄷ. 갑은 국물을 쏟아 병에게 화상을 입혔으므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일반 불법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갑이 병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11 특수 불법 행위 이해

[문제분석] 병이 맹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맹견이 을에게 달려들자 이를 피하다가 을이 상해를 입은 사례에서 법원은 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인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학원을 다니던 A가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에서 법원은 A의 법정 감독 의무자인 C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정답찾기] ㄱ. 법원은 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인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병이 동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ㄴ. C의 A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C에게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C가 감독 의무 위반 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아니라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원이 A에게 B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답찾기] ㄷ. C의 A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C에게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라는 점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아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 해당한다.

르. 법원은 병에게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동물의 점유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며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12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이해

문제분석 갑은 고가의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계약을 을(17세)과 체결한 이후 철회권을 행사하였다. 병은 고가의 자전거를 판매하는 계약을 을(16세)과 체결한 후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하였다. 철회권과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모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정답찾기 ②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해당 거래에 대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사례에서 갑이 철회권을 행사하여 해당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을의 법정 대리인은 갑과 을의 계약에 대해 추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계약 체결 당시 을이 미성년자인 것을 갑이 알았다면 갑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③ 갑은 철회권을 행사하였고, 병은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하였다. 따라서 을과 병은 모두 계약 체결 당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④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이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정과 병의 법정 대리인은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갑은 미성년자인 을 또는 을의 법정 대리인에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병은 미성년자인 정에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THEME

11

가족 관계와 법

수능 실전 문제

본문 62~67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③

05 ②

06 ③

07 ①

08 ②

09 ①

10 ⑤

11 ②

12 ⑤

01 혼인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분석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혼인 의사의 합치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A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 B는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률혼에 해당하며,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사실혼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⑤ 혼인 신고는 혼인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법률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만 갖춘 경우는 사실혼에 해당하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②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혼인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③ 혼인의 실질적 요건만 갖춘 사실혼에서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부부 상호 간의 동거·협조·부양 의무가 발생한다.

④ 18세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혼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02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 이해

문제분석 이혼의 유형 A와 B 중 A에만 해당하는 내용 세 가지를 서술하는 서술형 평가에서 학생은 2점을 얻었다.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 모두 혼인에 의해 발생한 친족 관계가 소멸되므로 학생의 답안에서 첫 번째 내용은 틀린 내용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이 옳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가 옳은 내용이므로 A는 협의상 이혼, B는 재판상 이혼이다.

정답찾기 ③ 협의상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이 가능한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상 이혼은 이혼 사유에 제한이 없다.

②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은 협의상 이혼이다.

④ 협의상 이혼은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이혼 판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법원을 거쳐야 이혼이 가능하다.

⑤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 모두 당사자 일방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

03 혼인의 성립 요건 및 친자 관계 이해

문제분석 갑(여)과 을(남)은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함께 살다가 갑과 을 사이에 병이 태어났다. 병은 갑과 을이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태어났으므로 을이 병과 친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갑과 을이 정을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 정은 갑과 을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정답찾기 ③ (다)에서 갑과 을은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병은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다. 따라서 갑과 사실혼 관계인 을이 병의 출생 당시 병과 친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함께 살더라도 혼인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 신고가 없다면 갑과 을에게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결혼식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 아니며,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가 있어야 한다.

④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 상호 간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라) 이후부터 갑과 을에게 일상 가사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갑과 을이 정을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 정은 갑과 을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04 유언과 상속 이해

문제분석 갑이 B를 인지한다면 갑과 B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며 갑의 사망 시 B는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갑이 A와 B에게 전 재산의 50%씩을 준다는 유언장이 유효하더라도 배우자 을과 자녀 병, 정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갑의 재산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다.

정답찾기 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의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갑의 사망 시 배우자인 을과 자녀 병, 정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법정 상속분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다. 갑의 유언이 무효이고 갑이 B를 인지한 경우 갑의 사망으로 을, 병, 정, B가 갑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때 배우자인 을은 갑의 직계 비속이 받는 상속분의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으므로 을, 병, 정, B가 받는 상속분의 비(比)는 3 : 2 : 2 : 2이다. 따라서 을은 갑의 재산의 1/3을 상속받는다.

오답피하기 가. 갑이 B를 인지한다면 B는 갑의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갑과 B의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양자는 입양을 통해 친자 관계가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갑의 유언이 무효이고 갑이 B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갑의 사망으로 을, 병, 정이 갑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때 배우자인 을은 갑의 직계 비속이 받는 상속분의 50%를 가산하여 받으므로 을, 병, 정이 받는 상속분의 비(比)는 3 : 2 : 2이다. 따라서 병과 정은 각각 갑의 재산의 2/7를 상속받는다.

05 재판상 이혼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판결문을 통해 갑과 을이 재판상 이혼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을은 갑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갑이 병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②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며,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상 이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오답피하기 ① 협의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③ □□ 가정 법원은 을이 갑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을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④ 을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더라도 혼인 중 취득한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은 인정된다.

⑤ 병에 대한 양육권을 갑이 가지므로 병을 양육하지 않는 을과 자녀 병에게 면접 교섭권이 발생한다.

06 친권의 의미와 내용 이해

문제분석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인 A는 친권이다. 친권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로 거소 지정권,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권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정답찾기 ③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 모두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원칙적으로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② 미성년자가 법률혼을 하면서 성년 의제된 경우 부모는 해당 자녀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 법원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등을 선고할 수 있다.

07 친양자 제도 이해

문제분석 갑이 을과 이혼하고 A를 양육하던 중 병을 만나 재혼하였다. 이후 병이 A를 입양하였는데, 제시된 자료를 통해 병은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①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며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갑과 병 사이에 태어난 B가 병의 성과 본을 따랐으므로 친양자로 입양된 A도 양부모 중 병의 성과 본을 따른다.

오답피하기 ②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 병이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 을과 A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③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된 A에 대한 친권자는 갑과 병이며, 을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 A는 갑과 병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⑤ 병이 A를 친양자로 입양한 이후 을과 병이 사망하면, A는 병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지만 을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다.

08 유언의 효력 이해

문제분석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법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을 가진다. 단, 유언자는 사

망 전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유언이 모두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유효하며, 나머지 유언은 모두 철회되어 효력이 사라진다.

정답찾기 ㄱ. (가)만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 유언에 따라 A가 갑의 전 재산을 받게 되며, 병과 B는 A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이혼한 배우자이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갑의 직계 존속인 정은 직계 비속인 A, B가 있으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ㄴ. 두 개의 유언장이 모두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므로 정이 갑의 전 재산을 받게 된다. 따라서 B는 정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유언은 유언의 작성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ㄷ. 갑이 남긴 두 개의 유언 모두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면 갑의 배우자인 병과 자녀 A, B에게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09 이혼의 법적 효과 이해

문제분석 B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A와 B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며 자녀 C에 대한 양육권은 A가 가지게 되었다.

정답찾기 ①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가 없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에 대한 양육권을 A가 가지므로 C를 양육하지 않는 B와 자녀 C에게 면접 교섭권이 발생한다. A와 B의 이혼으로 인해 혼인으로 발생한 친족 관계는 소멸되지만, 혼인 중 태어난 자녀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B와 C의 친자 관계는 유지된다.

오답피하기 을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병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정은 첫 번째 질문에, 무는 네 번째 질문에 틀린 응답을 하였다.

10 상속과 유류분 제도 이해

문제분석 신문 기사에는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소개되어 있다. 현행 민법에서 형제자매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데,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형제자매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정답찾기 ⑤ 현행 민법과 민법 일부 개정안에서 모두 배우자와 직계 비속에게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받는 법정 상속분의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시에도 직계 비속보다 더 많은 금액의 유류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이다.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은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동시에 유류분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② 민법 일부 개정안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형제자매가 법정 상속을 받을 권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③ 민법 일부 개정안은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의사를 존중하고자 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④ 민법 일부 개정안은 농경 사회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하던 과거와 달리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형제자매 간에 상호 부양하는 경우가 적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다.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11 상속 제도 이해

문제분석 갑과 B의 사망 순서, 갑과 병의 혼인이 법률혼인지 여부, 갑과 병의 혼인이 사실혼인 경우 갑이 C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정답찾기 ② (다)는 갑과 병의 혼인이 법률혼이며 갑이 사망하고 B가 사망한 경우이다. 이 경우 갑의 사망으로 갑의 배우자 병, 자녀 A, B, C가 갑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받는 상속분의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으므로 병은 6억 원, A, B, C는 각각 4억 원을 상속받는다. 이후 B의 사망으로 을이 B가 받은 4억 원을 상속받는다.

오답피하기 ① (가)의 경우 병과 C는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갑의 사망으로 A, B가 각각 9억 원씩 상속받게 되고 이후 B의 사망으로 을이 B가 받은 9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③ (라)의 경우 B는 재산이 없으므로 B의 사망 시 상속이 발생하지 않고 갑의 사망으로 갑의 자녀 A가 갑의 재산 18억 원을 모두 상속받는다.

④ (바)의 경우 B는 재산이 없으므로 B의 사망 시 상속이 발생하지 않고 갑의 사망으로 갑의 배우자 병, 자녀 A, C가 갑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받는 상속분의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으므로 병은 약 7.71억 원(=18억 원×3/7), A는 약 5.14억 원(=18억 원×2/7), C는 약 5.14억 원(=18억 원×2/7)을 상속받는다.

⑤ (나)의 경우 갑의 사망으로 A, B, C가 갑의 재산을 6억 원씩 상속받으며, B의 사망으로 을이 B가 받은 6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마)의 경우 B는 재산이 없으므로 B의 사망 시 상속이 발생하지 않고 갑의 사망으로 A, C가 각각 9억 원씩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나)와 (마)에서 C의 상속액은 다르다.

12 친자 관계 이해

문제분석 A, B, C, D는 모두 갑의 사망 시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갑이 A를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는 갑의 혼인 외의 출생자, B는 갑의 혼인 중의 출생자, C는 갑의 친양자가 아닌 양자, D는 갑의 친양자이다.

정답찾기 ⑤ 친양자로 입양되면 일반 입양과 달리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입양 이후 D는 무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만, C는 정과의 친족 관계가 유지된다.

오답피하기 ① A, B는 모두 갑의 친생자이다.

② A는 갑의 혼인 외의 출생자, B는 갑의 혼인 중의 출생자이다.

③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일반 입양과 달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C는 일반 입양되었으므로 입양으로 인해 C가 갑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④ D는 친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갑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69~74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④

05 ④

06 ③

07 ②

08 ⑤

09 ⑤

10 ⑤

11 ⑤

12 ④

01 형법의 이해

문제분석 형법은 범죄의 성립 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사 제재(형벌과 보안 처분)를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이며, 개인과 국가 기관 간의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ㄱ. 형법은 개인의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에 관한 법이므로 개인과 국가 기관 간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에 해당한다.
ㄷ. 보안 처분은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 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대안적 형사 제재 수단이다.

ㄹ.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해 부과하는 법의 박탈이므로 범죄가 성립되어야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답짜르기 ㄴ. 보안 처분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응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의 우려를 전제로 특별 예방의 관점에서 부과된다.

02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형법 이해

문제분석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법률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고, 법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과 보안 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 규범을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가)의 형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고, (나)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정답찾기 병. (가)의 범죄에 대한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인 반면, (나)의 범죄에 대한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것보다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가 더 중(重)죄라고 할 수 있다.

정. (가)의 형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고, (나)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오답짜르기 갑. (가)의 법 조항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예형인 자격 정지만 단독으로 선고할 수 있다.

을. (나)의 법 조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유형인 징역과 재산형인 벌금 중 1개만 선고할 수 있다.

03 죄형 법정주의 이해

문제분석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부

과할 것인가가 행위자의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최고 원리인 A는 죄형 법정주의이다.

정답찾기 ②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면 벌할 수 없는 이유는 범죄의 성립 요건 중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답짜르기 ① 죄형 법정주의에서 강조하는 성문의 법률은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③ 형법은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밑줄 친 ㉠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의미한다.

④ 죄형 법정주의에 따르면 범죄와 형벌이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성문의 법률이 아닌 관습법(불문법)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⑤ 죄형 법정주의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가 행위자의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형벌 법규를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를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04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이해

문제분석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로 이해되므로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아 부당한 법률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로 이해되므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적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관 및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정답찾기 ㄴ.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부당한 법률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ㄹ.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와 달리 입법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고자 한다.

오답짜르기 ㄱ.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로 이해되고,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로 이해된다.

ㄷ.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와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모두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05 소급효 금지의 원칙 및 범죄 성립 요건 이해

문제분석 (가)에서 법원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에서 법원은 B법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B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을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정답찾기 ㄱ.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에서 법원은 갑의 행위가 A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ㄷ. 법원은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B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ㄹ.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B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당연히 B법에 규정되어 있던 범죄는 위헌 결정 이후에는 범죄로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나)에서 법원은 을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답짜기 ㄴ. (가)에서 갑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갑의 행위당시에 해당 행위는 A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범죄의 성립 요건 중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06 명확성의 원칙 이해

문제분석 헌법 재판소는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 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하는 법 조항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답셋기 ③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답짜기 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이 적정해야 한다는 것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②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⑤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07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분석 피고인 갑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동 거리와 경로 등을 보면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에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갑의 음주 운전 행위가 교통사고라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정답셋기 ㄱ. 도로 교통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규정하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

ㄹ. 위법성 조각 사유 중 긴급 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답짜기 ㄴ. 2심 재판부가 □□ 지방 법원 형사 항소부이므로 1심 재판부는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이다.

ㄷ. 항소심 재판부가 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갑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08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분석 (가)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한 이유는 갑의 가방에 을의

지갑을 넣은 사람이 갑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에서 법원은 갑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에서 법원은 갑의 행위가 책임 조각 사유인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하였다. (라)에서 법원은 갑이 심신 상실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유죄 판결을 하였다.

정답셋기 ⑤ (라)에서 갑의 변호인은 갑이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심신 상실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갑의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답짜기 ① (나)에서 갑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에는 '유죄'가 들어가고, (라)에서 갑의 심신 상실 상태를 주장하는 갑의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에는 '유죄'가 들어간다.

② (가)에서 갑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갑의 행위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③ (나)에서 갑의 변호인은 갑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다)에서 갑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위법 행위를 하였다는 데 대하여 갑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인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09 형벌의 종류 이해

문제분석 금고는 자유형이고,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지 않으므로 카드 A는 1칸 전진한다. 몰수는 재산형이고, 범죄 행위와 관련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이므로 카드 B는 1칸 후퇴한다. 구류는 자유형이고, 1일 이상 30일 미만 교정 시설에 수용하므로 카드 C는 1칸 전진한다. 자격 상실은 명예형이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자격을 박탈하므로 카드 D는 2칸 전진한다. 벌금은 재산형이고,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 금액의 지불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므로 카드 E는 2칸 전진한다.

정답셋기 ⑤ 카드 E는 2칸 전진, 카드 A는 1칸 전진, 카드 B는 1칸 후퇴이므로 최종 위치는 (나)이다.

○답짜기 ① 카드 A는 1칸 전진, 카드 C는 1칸 전진, 카드 B는 1칸 후퇴이므로 최종 위치는 (가)이다.

② 카드 A는 1칸 전진, 카드 D는 2칸 전진, 카드 B는 1칸 후퇴이므로 최종 위치는 (나)이다.

③ 카드 D는 2칸 전진, 카드 E는 2칸 전진, 카드 B는 1칸 후퇴이므로 최종 위치는 (다)이다.

④ 카드 D는 2칸 전진, 카드 A는 1칸 전진, 카드 C는 1칸 전진이므로 최종 위치는 (라)이다.

10 보안 처분 이해

문제분석 법원은 갑의 행위는 의지를 정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갑의 행위가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답셋기 ㄷ. 재판부는 갑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ㄹ. 의지를 정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는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의미한다.

○답푼하기 ㄱ. 무죄를 선고하여 벌하지 않는 이유는 갑의 행위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ㄴ. 보안 처분은 일반적으로 유죄 선고 시 부과된다. 다만, 치료 감호와 같은 보안 처분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부과될 수 있다.

11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이해

문제분석 대법원은 농업용 동력 운반차인 사건 차량은 농업 기계화 촉진법에서 정한 농업 기계이지, 구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시행 규칙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인 구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답찾기 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어떤 사항에 대한 법규가 없을 경우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답푼하기 ①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범죄와 형벌은 관습법에 의해 규정할 수 없다.

②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

④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범죄와 형벌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12 형벌 및 보안 처분 이해

문제분석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해 부과하는 법익의 박탈로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몰수 9가지가 있다. 보안 처분은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대안적 형사 제재로, 치료 감호, 보호 관찰,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이 있다.

정답찾기 ㄴ. 보호 관찰, 치료 감호, 사회봉사 명령,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은 모두 보안 처분에 해당한다.

ㄹ. 보안 처분은 형벌의 대안적 형사 제재 수단이다.

○답푼하기 ㄱ. 금고는 자유형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고, 벌금은 재산형으로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ㄷ. 형벌과 보안 처분은 모두 범죄 예방 목적이 있지만, 형벌은 보안 처분에 비해 인과응보적 성격이 강하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76~81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④

06 ④

07 ⑤

08 ②

09 ③

10 ③

11 ④

12 ④

01 수사의 절차 이해

문제분석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국가 기관의 활동을 수사라고 한다. 따라서 A는 수사이다.

정답찾기 ㄱ. 수사 기관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ㄴ. 수사는 일차적으로 사법 경찰관이 담당하며,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ㄷ. 고소, 고발, 현행범의 체포, 긴급 체포, 범인의 자수, 수사 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답푼하기 ㄹ. 수사는 사법 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검사의 공소 제기나 불기소 처분에 의해서 종결된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하면 수사는 종결되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02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형사 절차는 국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과 범죄자에 관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혀 내어 형사 제재를 부과하고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수사 → 기소 → 공판 → 선고 → 형의 집행' 순으로 이루어진다.

정답찾기 ⑤ 형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진다.

○답푼하기 ①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불구속 수사)이 원칙이다.

② 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③ 기소는 검사가 수사 결과 객관적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일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검사가 기소를 해야 공판이 이루어진다.

④ 형사 재판(공판)에서 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이다.

03 국민 참여 재판 이해

문제분석 A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배심원의 확보, 재판 진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의 축적 등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통해 A는 국민 참여 재판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ㄱ. 국민 참여 재판은 지방 법원 합의부 관할 형사 사건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에 '지방 법원 합의부'가 들어갈 수 있다.

ㄷ. 국민 참여 재판은 민사 사건이 아닌 형사 사건에만 적용된다.
 ㄹ. 국민 참여 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국민 참여 재판의 경우에는 1심 법원이 지방 법원 합의부이므로 2심 법원은 고등 법원이다. 그러나 갑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사건이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갑이 항소하면 갑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04 형의 선고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형벌이 집행되는 B는 실행이고, 형의 선고를 미루는 A는 선고 유예이므로 C는 집행 유예이다.

정답찾기 ③ 실행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교정 시설에 구금되는 경우(예 징역)도 있고 구금되지 않는 경우(예 벌금)도 있다. 그러나 선고 유예,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교정 시설에 구금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집행 유예는 실제로 형벌이 집행되지 않고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므로 ㉠, ㉡에는 모두 '아니요'가 들어간다.

② 실행, 선고 유예, 집행 유예는 모두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형의 선고 유형이다.

④ 선고 유예는 실효 없이 유예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⑤ 집행 유예는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05 형사 재판 절차 이해

문제분석 형사 재판 절차는 '모두 절차 → 사실 심리 절차 →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된다. 모두 절차에서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 고지, 인정 신문, 검사의 모두 진술, 쟁점 정리 및 증거 관계 진술 등이 이루어지고, 사실 심리 절차에서는 증거 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 진술(구형) 등이 이루어지며, 심리 결과에 따라 무죄 판결 또는 유죄 판결을 내린다.

정답찾기 ㄱ.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및 형사 재판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ㄷ. 구형은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유죄에 따른 형벌을 구형하더라도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ㄹ. 1심 또는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형사 재판의 당사자인 검사, 피고인은 일정 기간 내에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는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소할 수 없다.

06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와 명예 회복 제도 이해

문제분석 을은 갑으로 인해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무죄 판결이 확정된 유명 가수인 A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서 언론을 통해 자신이 폭행범으로 인식된 것 같아 억울해 하고 있으므로 명예 회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답찾기 ㄱ.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을은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ㄴ. 1심 재판에서 갑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1심 재판 중에 을은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을 받아 낼 수 있는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ㄹ.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1년간 법무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무죄 등의 재판을 받은 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제도를 명예 회복 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A는 명예 회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ㄷ. 형사 보상 제도는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일단 구금된 적이 있는 자가 활용할 수 있다. A는 형사 절차 중 구금된 적이 없으므로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07 구속 적부 심사 제도와 보석 제도 이해

문제분석 (가)는 피의자 갑이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는 문서이고, (나)는 법원이 피고인 을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정답찾기 ㄷ.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자신을 석방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기소 전에 활용되고, 보석 제도는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제도이므로 기소 후에 활용된다.

ㄹ. (가)는 피의자 갑 측이 제출한 구속 적부 심사 청구서이고, (나)는 피고인 을에 대한 보석을 법원에서 허가한다는 결정문이다.

오답피하기 ㄱ.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 갑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갑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ㄴ. 수형자의 태도 등이 양호하여 누우침이 뚜렷한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는 가석방 제도이다.

08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피의자에 대한 구속 시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며, 검사의 영장 청구는 사법 경찰관의 영장 신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다. 검사의 영장 청구가 있으면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면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이를 구속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한다.

정답찾기 ② 수사 기관과 법원은 각각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를 진다.

오답피하기 ① 피의자에 대한 체포 시 체포 영장이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현행범이거나 긴급 체포 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③ 그림에서 구속 영장 신청 및 청구는 갑에 대한 구속 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갑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이 없다.

- ④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검사의 구속 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지 피의자의 청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갑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다.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는 것은 기소를 통해서이다.

09 배상 명령 제도 이해

문제분석 배상 명령 제도는 상해죄 등 일정한 사건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사례에서 대법원은 1심 법원 판결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해 배상금 등을 지급 하였으므로 갑의 을에 대한 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정답찾기 ③ 배상 명령은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와 함께 내려지므로 갑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면 배상 명령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대법원은 1심 법원의 배상 명령을 유지한 원심 중 배상 명령 부분을 파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의 배상 명령을 모두 인용하지 않았다.

② 대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한 배상금이 5,0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배상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배상금에 합의하여 갑의 을에 대한 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④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배상 명령 부분만 파기하였으므로 갑에 대한 징역 4개월 선고는 유지된다.

⑤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갑은 을과 합의한 배상금을 을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합의한 배상금을 되돌려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원심의 배상 명령을 취소한 것이다.

10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갑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지만,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고, 원심 법원인 2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정답찾기 나. 갑이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파악할 수 없다. (가)에는 옳은 법적 판단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다. 구속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에 옳지 않은 법적 판단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피하기 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되므로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였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된다. 따라서 ㉠은 '1점'이다. 가석방 제도는 구금된 사람을 전제로 하므로 집행 유예 선고를 받은 갑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은 '0점'이다.

라. 대법원은 원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 아니다. (다)에는 옳은 법적 판단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해당 내용은 (다)에 들어갈 수 없다.

11 형사 보상 제도 이해

문제분석 형사 보상 제도는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무죄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되었던 사람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거나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구금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답찾기 가. 형사 보상은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소 유예는 무죄 취지가 아닌 경우의 불기소 처분이며, 집행 유예는 유죄 선고이다. 따라서 옳게 답한 학생은 을과 병이다.

나. 선고 유예 판결은 무죄 판결이 아니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다. 구속 수사 후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피하기 라. 구속 수사를 받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도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소년 사건의 처리 이해

문제분석 갑, 을은 병, 정과 달리 소년 사건의 대상이 아니라는 조건을 통해 갑, 을의 연령은 각각 9세, 19세 중 하나이고, 병, 정은 각각 12세, 16세 중 하나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을과 정이 형사 미성년자라는 조건을 통해 을은 9세, 정은 12세, 갑은 19세, 병은 16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카드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카드 1>	<카드 2>	<카드 3>	<카드 4>	<카드 5>
병	갑, 병	병, 정	을, 정	정

정답찾기 가. <카드 4>만 을에 해당되는 카드이므로 ㉠은 '0점'이다. <카드 3>, <카드 4>, <카드 5>만 정에 해당되는 카드이므로 ㉡은 '2점'이다.

나. 학생 A가 감점 없이 모두 옳은 카드만 선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선택한 카드	점수
갑(19세)	<카드 2>	1점
을(9세)	<카드 4>	1점
병(16세)	<카드 1>, <카드 2>, <카드 3>	3점
정(12세)	<카드 3>, <카드 4>, <카드 5>	3점
총점		8점

따라서 총점은 8점이다.

다. (가)에 '<카드 1>', '<카드 2>'가 들어가면 0점이 되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피하기 라. (나)에 '<카드 1>', '<카드 2>', '<카드 3>', '<카드 5>'가 들어가면 2점이 되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83~87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③

05 ①

06 ③

07 ①

08 ③

09 ⑤

10 ③

01 노동법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은 근대 시민법에 따른 계약의 자유가 노동관계에 적용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고대 사회와 달라진 점을 나타낸다. 그러나 노동관계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평등하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이 등장한 것을 보여 준다.

정답찾기 ⑤ 노동법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권을 가지기 위해 노동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오답짜이기 ① 노동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법의 성격을 가진다.

② 노동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노동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체결하는 계약 내용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한다.

④ 노동법은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다.

02 근로 3권의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 3권을 규정하고 있다. A는 단결권, B는 단체 교섭권, C는 단체 행동권이다.

정답찾기 ㄱ.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ㄴ. 사용자가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답짜이기 ㄴ. 근로자는 노동 쟁의가 발생한 경우 파업, 태업과 같은 쟁의 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 직장 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개시한 이후 이에 사용자가 대항하는 행위를 말한다.

ㄷ.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경우 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03 부당 노동 행위 사례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부당 노동 행위를 설명한 것으로, A는 부당 노동 행위이며, (가)에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들어가

야 한다.

정답찾기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경우는 근로 3권 중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오답짜이기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로 시간에 태만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경우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휴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사용자가 정당하지 않은 쟁의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경우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사용자가 업무 중 동료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을 명한 경우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04 연소 근로자의 근로 보호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사례]는 연소 근로자 A가 사용자 B의 대형 마트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내용이다. [질문 1]에 대한 옳은 응답은 '예', [질문 2]와 [질문 3]에 대한 옳은 응답은 '아니요'이다.

정답찾기 ㄴ. ㉠이 '아니요'라면, 옳은 [질문 1]에 '예', [질문 2]에 '아니요', [질문 3]에 '아니요'라고 응답하였으므로 방을 탈출할 수 있다. ㉡이 '예'라면, [질문 1]에 갑과 을이 '예'라고 한 것은 옳은 응답이므로 옳게 응답한 학생은 2명이다.

오답짜이기 ㄱ. ㉠이 '아니요'라면, 갑은 [질문 2], [질문 3]에는 옳은 응답을 하였지만, [질문 1]에는 옳지 않은 응답을 하였으므로 방을 탈출할 수 없다.

ㄴ. ㉡이 '예'라면, [질문 3]에 대한 옳은 응답은 '아니요'이므로 옳게 응답한 학생은 갑과 을 2명이다.

05 연소 근로자의 근로 보호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청소년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근로 계약 시 필요로 하는 문서이다. 취직 인허증은 고용 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 주는 증명서이다.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사람 포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지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경우 15세 미만인 사람도 취업이 가능하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 계약에 필요한 문서이다.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답찾기 ㄱ. 취직 인허증은 고용 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 주는 증명서이므로 옳은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은 갑이 중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

ㄴ. 무는 병을 고용하면서 사업장에 취업 동의서와 병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오답짜이기 ㄷ. 정은 병을 대리하여 무와 병의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ㄴ. 취직 인허증, 취업 동의서는 모두 근로 기준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는 근

로 3권의 보장, 부당 노동 행위, 노동 쟁의 해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06 연소 근로자의 근로 보호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연소 근로자인 을이 사용자인 갑과 작성한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정답찾기 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 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을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므로 갑과 을이 근무일의 연장 근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합의한다면 갑은 을을 1일 1시간씩 더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오답파하기 ① 을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휴게 시간 제외)이고, 휴게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시급 계산 시 제외되는 시간이다. 을이 계약대로 근무할 경우 을의 1일 임금은 70,000원이다.

② 을의 휴일은 월·화요일이므로 주말에 근로하는 것이 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④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을은 갑에게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근로 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시간당 1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 계약을 지켜야 한다. 갑이 근로 계약에서 합의한 임금과 달리 법정 최저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07 부당 해고 구제 절차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은 A 주식회사에 다니는 갑의 해고와 관련된 판결문 중 일부이다.

정답찾기 ① 부당 해고에 대해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피고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이다.

오답파하기 ② 갑이 제기한 소송은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서 제기하는 행정 소송이다.

③ 중앙 노동 위원회는 A 주식회사의 처분이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근로자인 갑이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④ □□ 행정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처분이 부당 해고라고 보았다. 부당 노동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⑤ 갑이 제기한 소송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 소송으로 3심제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 행정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다.

08 부당 해고 구제 절차 이해

문제분석 A 회사가 갑을 해고하자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

제 신청을 하였고, □□ 지방 노동 위원회는 A 회사의 해고가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갑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 노동 위원회는 A 회사의 해고가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정답찾기 ③ □□ 지방 노동 위원회는 A 회사가 갑을 해고한 행위에 대해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중앙 노동 위원회는 A 회사가 갑을 해고한 행위에 대해 부당 해고라고 보았다.

오답파하기 ① 부당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인 갑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에는 갑이 속한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지방 노동 위원회는 A 회사가 갑의 근로 3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중앙 노동 위원회는 A 회사가 갑의 근로 3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④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A 회사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갑은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09 근로 계약 사례 분석

문제분석 갑과 을은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 계약 체결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미성년자이다. 을은 갑과 달리 야간 또는 휴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갑은 18세, 을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ㄷ. 갑은 연소 근로자가 아니고 을은 연소 근로자이므로 병은 을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ㄹ.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갑과 을은 병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파하기 ㄱ.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갑과 을의 근로 시간은 7시간이고 1시간 30분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었으므로 휴게 시간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

ㄴ. 갑과 을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다. 연소 근로자인 을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을은 근무일의 연장 근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합의한다면 1일 1시간씩 더 근로할 수 있다.

10 근로자의 권리 침해 사례 분석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사용자인 을이 근로자인 갑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이다.

정답찾기 ㄴ. 해고의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갑에 대한 을의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ㄷ.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근무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갑은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오답짜이기 ㄱ. 갑의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므로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ㄷ. 갑은 사용자인 을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으므로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 노동 행위는 아니므로 근로 3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이유로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THEME

15

국제 관계와 국제법

수능 실전 문제

본문 89~92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③

05 ③

06 ①

07 ①

08 ③

01 국제 관계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국제 형사 재판소 설립을 통해 국제 사회가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에 형사 처벌로 대응하려 한다는 점에서 국제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은 국제 형사 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 규정에 대한 서명을 철회하여 현재 회원국이 아니고, 미군의 행위에 대해 국제 형사 재판소가 수사를 추진하려 하자 국제 형사 재판소의 업무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방해하는 등 강대국에 의한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④ 국제 형사 재판소가 강대국에 의해 수사에 난항을 겪는 모습을 통해 힘의 논리가 작동하지만, 국제 사회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형사법적인 강제 제재가 가능한 국제 형사 재판소를 설립하는 로마 규정을 체결하고, 수사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와 국제 규범이 공존하고 있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오답짜이기 ① 오늘날 국제 관계는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② 국제 관계가 주권 국가들을 기본 단위로 하여 구성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제시문에 국가 간 주권 평등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경제적 실리보다 이념에 기반한 동맹을 중시하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 중 국제 비정부 기구의 활동과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시문에 해당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02 국내법과 국제법 이해

문제분석 민법은 국내법 중 법률에 해당하고 아동 권리 협약은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조약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③ 우리나라에서 조약에 대한 체결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오답짜이기 ① 국내법인 민법은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국가 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② 국내법인 민법은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④ 법률과 조약은 모두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⑤ 민법은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03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비교

문제분석 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가)는 대결보다는 협력, 일방주의보다는 다자주의를 중시하고 있으며, 국제 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갑국의 안보 정책에 대해 (나)는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힘의 우위를 강

EBS

EBS

EBS

수능 기출의 미래

두꺼운 분량을 벗어난 가장 완벽한 기출문제집
쉬운 문항은 간략하고 빠르게,
고난도 문항은 상세하고 심도 있게

화하면서 갑국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정답찾기 ③ 자유주의적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의 역할을 중시한다.

오답짜기 ①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힘의 균형을 강조한다.

②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점을 간과한다.

④ 자유주의적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국제 평화 보장을 위해 집단 안보 체제 구축을 중시한다.

⑤ 현실주의적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과 달리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한다.

04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일어난 아테네와 펠로스와의 전쟁에서의 협상 과정은 국제 관계에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끊임없는 지배욕에 기초해 있는 인간 본성이 관습이나 도덕, 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보다 우선함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정답찾기 나.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정부 상태로 규정한다.

다.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력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답짜기 가.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국제기구와 같은 초국가적 행위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르. 자유주의적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05 조약의 이해

문제분석 자료는 양자 조약인 대한민국과 키르기스 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정보를 보여 주고 있다.

정답찾기 ③ 우리나라 헌법 제89조에서는 조약안에 대해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무 회의 심의는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에 해당한다.

오답짜기 ① 조약은 조약 체결의 당사자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이므로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②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국내법 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헌법보다 하위에 있다고 본다.

④ 우리나라 헌법 제60조에서는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비준권을 가지며,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조약 체결권자가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비준에 해당한다.

06 국제 관계의 변천 과정 이해

문제분석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유럽에서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념 대립으로 양극 체제가 성립하였고, 이를 냉전 체제라고 한다. 이후 제3 세계의 부상으로 냉전 체제는 서서히 완화되다가 몰타에서 이루어진 미소 정상 회담에서 몰타 선언으로 냉전 체제의 종식이 선언되었다.

정답찾기 가.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 사회에서 주권 국가를 단위로 한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 몰타 선언 이후 국제 사회에서는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오답짜기 다. 냉전 체제 시기에는 양극 체제가 형성되었으나 제3 세계의 부상으로 서서히 다극 체제로 전환되었으므로 냉전 체제 이전에는 다극 체제, 몰타 선언 이후에는 양극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맹이 설립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맹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제 연합이 설립되었다.

07 국제법의 한계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에 나타난 교토 의정서와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은 국제 연합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협정이다. 여러 국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체결한 다자 조약에 해당하지만, 이행을 준수하는 국가가 적고, 체결을 반복하는 국가도 있다.

정답찾기 ① 다자 조약인 교토 의정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가가 거의 없으며, 파리 협정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거나 감축량을 속이는 국가의 사례를 통해 국제법은 법의 이행을 강제할 집행 기구가 없어 규범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짜기 ② 국제법과 국내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의 우선 순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제시문에서 이를 추론할 수 없다.

③ 성문화되지 않은 국제법인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도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규범으로 적용된다.

④ 국제법 제정 과정에서 강대국의 영향력이 작용하여 강대국에 유리한 내용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제시문에서 이를 추론할 수 없다.

⑤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대외적 약속 행위이다. 이러한 약속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양자 조약이나 다자 조약 모두에 해당하므로 조약은 조약 체결의 당사자인 국가 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08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분석 A는 조약, B는 국제 관습법, C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정답찾기 나. 우리나라의 법원(法院)은 재판에서 국제 관습법을 판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하는 사례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오답짜기 가. 국가나 국제기구는 조약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르. 국제법의 법원(法源)인 법의 일반 원칙은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도 우리나라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94~97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②

05 ⑤

06 ①

07 ①

08 ④

01 국제 문제 사례 분석

문제분석 제시문은 국제 문제인 코로나19에 관한 것으로, 국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국제 문제는 특정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국제 문제는 개별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정답찾기 ⑤ 제시문은 국제 문제 해결을 개별 국가의 대응에만 맡겨 놓기보다는 국제 사회 주체들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 반영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관련이 없는 진술이다.

② 분쟁 당사국이 국제 사법 기관에 제소하여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은 관련이 없는 진술이다.

③ 분쟁 당사국끼리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 강대국의 주도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관련이 없는 진술이다.

④ 각 국가들의 정치적인 이념을 중시하여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관련이 없는 진술이다.

02 국제 비정부 기구 사례 분석

문제분석 제시문은 세계 자연 기금(WWF)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국제 비정부 기구가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정답찾기 나. 국제기구는 회원 자격에 따라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와 민간 차원의 국제 비정부 기구로 나뉜다. 세계 자연 기금은 국제 비정부 기구이다.

다. 국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오답피하기 가.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이다.

르. 국제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국가들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03 국제 문제 해결 방법 분석

문제분석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A는 사법적 해결, B는 외교적 해결이다. 사법적 해결은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 사법 기관에 제소하여 국제법에 따라 해결한다. 외교적 해결은 분쟁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절차에 합의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제3자의 조정 등을 활용한다.

정답찾기 가. 사법적 해결의 한계는 당사국이 국제 사법 기관의 판결에 불복하면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 사법적 해결은 국제 사법 기관에 제소하여 국제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르. 외교적 해결은 분쟁 당사자끼리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제3자의 조정 등을 활용한다. 그러므로 (나)에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오답피하기 나. 사법적 해결과 외교적 해결 모두 국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04 우리나라의 시기별 외교 정책의 특징 분석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우리나라의 시기별 국제 관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정답찾기 가. 1950년대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념 대립으로 냉전 체제가 형성된 시기로 우리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다. 1980년대 후반은 몰타 선언과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가 이루어진 시기로 국제 관계에서 냉전 체제가 종식되어 우리나라는 북방 외교를 통해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맺었다.

오답피하기 나. 1996년에 우리나라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회원국의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 발전, 개발 도상국의 건전한 경제 성장,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 무역 확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결성된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르. 1950년대 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외교 전략을 활용하였다.

05 안전 보장 이사회 이해

문제분석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이다.

정답찾기 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에 해당한다.

르.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9개국 이상의 찬성 투표로 이루어진다. 다만,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의 결정은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된다.

오답피하기 가. 국제 연합은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나.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06 국제 사법 재판소 이해

문제분석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A는 국가 간 분쟁에 국제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사법 기관인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정답찾기 ① 국제 사법 재판소는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 서로 국적이 다른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된다.

오답피하기 ②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의 당사자는 국가이며, 국제 연합의 가맹

국만 재판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관습법뿐만 아니라 법의 일반 원칙, 조약도 재판의 준거로 활용한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제재할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07 국제 연합(UN)의 주요 기관 분석

문제분석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A는 총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정답찾기 ㄱ. 총회에서는 주권 평등 원칙에 따라 1국 1표로 표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ㄴ. 안전 보장 이사회는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개입을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ㄷ.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ㄹ.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가 2년이다.

08 국제 연합(UN)의 주요 기관 분석

문제분석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A는 총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정답찾기 ㄱ.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갑국의 반대로 표결에 참여한 14개국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이 부결되었다면, 갑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에 해당한다.

ㄷ.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된다.

ㄹ.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국제 사법 재판소는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에 권고하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결정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에 관하여 강제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일방의 제소에 상대국이 응하여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1회

본문 100~105쪽

1 ②	2 ①	3 ③	4 ①	5 ③
6 ①	7 ④	8 ④	9 ④	10 ⑤
11 ⑤	12 ④	13 ②	14 ④	15 ④
16 ②	17 ③	18 ④	19 ②	20 ②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이해

문제분석 갑의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을의 관점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정답찾기 ②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의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을 정치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오답피하기 ①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③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본다.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소수의 통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⑤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분리수거함 위치 선정을 위한 아파트 입주민 회의를 정치로 본다.

2 정치 과정의 이해

문제분석 그림은 이스턴(Easton, D.)의 정치 과정 모형이다. A는 투입, B는 산출이며, 정책 결정 기구는 일반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을 의미한다.

정답찾기 ① 의회는 입법부로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② 집단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도 정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A는 정책 결정 기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요구하거나 기존의 정책에 대하여 지지 또는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인 투입이며, B는 정책 결정 기구에 의하여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과정인 산출이다.

④ 법률안 공포는 산출의 사례에 해당한다.

⑤ 정당을 통한 정책 제안은 투입이나 환류의 사례에 해당한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을 통해 ○○부가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문화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정답찾기 ③ 문화를 국가에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오답피하기 ① 통일을 평화적으로 추구한다는 원리는 평화 통일 지향

이다.

- ②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 ④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 ⑤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4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이해

문제분석 지방 자치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 지방 선거를 통해 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A는 지방 의회, B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정답찾기 ㄱ. 지방 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ㄴ. 지방 자치 단체장은 임기 중에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ㄷ. 지방 의회가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갖는다.

ㄹ.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에는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가 존재한다.

5 정치 참여 집단의 이해

문제분석 A는 시민 단체, B는 이익 집단, C는 정당이다.

정답찾기 ③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단은 정당이다.

오답피하기 ① 공적 이익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이익 집단이다.

②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집단은 정당이다.

④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집단은 정당이다.

⑤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모두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6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찾기 ㄱ.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하므로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이 정의에 부합하는지도 중시하기 때문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위헌 법률 심사제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오답피하기 ㄷ.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법의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도 중시한다.

ㄹ.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의 권력 행사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7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는 청구권과 사회권이다.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따라서 A는 자유권, B는 사회권, C는 청구권이다.

정답찾기 ④ 자유권은 사회권과 달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오답피하기 ① 바이마르 헌법에 처음으로 규정된 권리는 사회권이다.

②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③ 국가 권력이 행사되지 않으므로 보장되는 소극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⑤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 배제를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8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이해

문제분석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며,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거로 직접 선출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 을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정답찾기 ㄱ.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ㄴ.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다.

ㄷ.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제에서와 달리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ㄹ.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이 인정되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9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이해

문제분석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헌법 재판소, D는 국무총리이다.

정답찾기 ④ 국무총리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인 국무 회의에서 부의장이다.

오답피하기 ①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 국가 기관은 국회이다.

②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감사원이다.

③ 상고·재항고 사건의 최종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 기관은 대법원이다.

⑤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 재판소장은 모두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

10 선거 자료 분석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한 갑국의 현행 선거 결과와 개편안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선거 결과〉

(단위: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지역구 의석수	0	2	1	1
비례 대표 의석수	3(3.3)	2(2.2)	5(4.4)	1(1.1)
총의석수	3	4	6	2

〈개편안 선거 결과〉

(단위: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지역구 의석수	1	3	1	3
비례 대표 의석수	2(2.1)	1(1.4)	3(2.8)	1(0.7)
총의석수	3	4	4	4

정답찾기 ⑤ D당의 현행 비례 대표 의석수는 1석, 개편안 적용 시 비례 대표 의석수는 1석으로 현행과 개편안 적용 시 비례 대표 의석수는 같다.

오답짜하기 ① 현행 선거 결과 A당은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C당은 지역구 의석을 1석 확보하였다.

② 개편안 적용 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사표는 감소한다.

③ 현행은 소선거구제, 개편안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④ B당의 현행에서 총의석수는 4석, 개편안 적용 시 총의석수는 4석으로 현행과 개편안 적용 시 총의석수는 같다.

11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분석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사적 지배권은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나 타인은 함부로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보는 (가)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개인의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 (나)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정답찾기 ⑤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모두 현대의 사법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오답짜하기 ①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② 환경 오염의 원인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③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④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12 가족 관계와 법 이해

문제분석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함으로써 법률혼이 성립하였고 이후 A가 태어났으므로 A는 갑과 을의 혼인 중의 출생자이다. 이후 갑과 을은 협의상 이혼을 하였고, 갑과 병이 재혼하면서 병이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따라서 입양 이후에도 을과 A 사이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정답찾기 ④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자녀에게 면접 교섭권이 발생한다.

오답짜하기 ① 혼인 신고는 혼인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② 혼인 신고 이전의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 상호 간의 동거·협조·부양 의무와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된다.

③ 갑과 을은 협의상 이혼을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친다. 이때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친다.

⑤ 병은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 을과 A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13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이해

문제분석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므로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

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속임수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행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상대방이 믿게 한 경우 등에서는 해당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찾기 갑.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병. 계약 당시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성년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였다면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은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오답짜하기 을. 미성년자가 고가의 한정판 미니카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질문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질문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며,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14 특수 불법 행위 이해

문제분석 갑의 자녀 A가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A의 책임 능력 유무에 따라 갑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A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 갑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으며, A에게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 갑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을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직원 B가 업무 수행 중에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을은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찾기 ④ 직원 B가 뜨거운 커피를 쏟아 손님에게 상해를 입은 경우 B를 고용한 을이 손님에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을이 B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을의 책임은 면제된다.

오답짜하기 ① A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갑은 특수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A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A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갑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B에게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B는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⑤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례에서 을과 B가 공동으로 손님에게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15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분석 상해죄로 기소된 갑에게 법원은 갑의 행위가 자신의 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법원이 갑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한 것이다. 감금죄로 기소된 병에게 법원은 감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법원이 병의 행위가 감금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답찾기 ④ 갑은 상해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었으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병은 감금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오답피하기) ① 법원은 갑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② 법원은 병의 행위에 대해 감금죄의 구성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③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은 책임을 의미한다. 법원이 갑과 병에게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다.
- ⑤ 갑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받았고, 병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 형벌과 보안 처분 이해

문제분석 자료를 통해 피고인 갑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 재판을 담당한 ○○ 고등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갑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 3년간 보호 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압수된 라이터 몰수를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② 징역과 몰수는 형벌에 해당하고,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은 보안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 고등 법원은 갑에게 형벌과 보안 처분을 모두 부과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항소심을 ○○ 고등 법원이 담당하였으므로 1심 재판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였을 것이다.

③ 몰수는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로 재산형에 해당한다.

④ 집행 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집행 유예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갑이 4년간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아니다.

⑤ 소년법상 보호 처분으로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선고 유예를 받거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가석방되는 경우 등에도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호 관찰을 받는 것만으로 피고인을 19세 미만이라고 볼 수 없다.

17 형사 보상 제도와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이해

문제분석 (가)에는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들어가야 하고, (나)에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

정답찾기 ③ 살인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을 살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해 구금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불구속 수사를 받았고 미결 구금된 적이 없으므로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②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을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④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정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므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⑤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무가 피고인에게 민사적 손해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8 연소자의 근로 계약 이해

문제분석 갑과 달리 을은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연소 근로자인 을을 고용한 병은 을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또한 연소 근로자인 을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연장 근로도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찾기 ④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따라서 갑의 휴게 시간과 을의 휴게 시간은 모두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을의 근무일은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이므로 을의 토요일 근로는 휴일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을은 연소 근로자로서 현재 1일 7시간 근로하고 있으므로 을과 병이 합의하면 을은 근무일에 1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③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다. 을은 17세이므로 근로 계약 체결 시 취직 인허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갑은 을과 달리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은 갑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아도 된다.

19 국내법과 국제법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형사 소송법은 국내법에 해당하며,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은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조약에 해당한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고유한 입법 기구가 없어 국제 사회 전반에 적용할 범규범의 제정이 어렵다. 또한 국제법을 강제할 집행 기구가 없어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에 어려움이 있다.

정답찾기 ②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조약의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헌법 재판소는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이 국내법과 갖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았지만,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본 것은 아니다.

③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강제로 집행할 집행 기구가 없다.

④ 갑은 헌법 재판소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지, 법률이 조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다.

⑤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과 비준은 모두 대통령의 권한이다.

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분석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A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며,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관은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그런

데 C에는 상임 이사국이 있으므로 C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따라서 B는 총회이다.

정답찾기 ② 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며, 주권 평등의 원칙을 반영하여 1국 1표로 표결한다.

오답짜르기 ①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며, 개인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은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안전을 부결시킬 수 있다.

④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군사적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안전 보장 이사회의 15개 이사국 중 상임 이사국을 제외한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은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총회에서 선출된다.

실전 모의고사 2회

본문 106~111쪽

1 ⑤	2 ④	3 ①	4 ③	5 ④
6 ④	7 ④	8 ①	9 ⑤	10 ②
11 ④	12 ①	13 ④	14 ②	15 ②
16 ④	17 ③	18 ⑤	19 ②	20 ④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는 모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학생이 받은 점수가 2점이므로 A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B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정답찾기 ⑤ 학생이 받은 점수가 2점이므로 (가)에 틀린 답안이 들어 가야 한다.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본다.’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짜르기 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와 관련된 활동만을 정치로 보므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정치로 보지 않는다.

② 정치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는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로 보는 것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③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정치 참여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2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권한 이해

문제분석 A는 대통령, B는 국무총리, C는 국회, D는 헌법 재판소이다.

정답찾기 가. 국무 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나.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되는 국가 기관은 국회와 대통령이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짜르기 나.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 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A는 국민 주권주의, B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찾기 ①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오답짜르기 ② 국제법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③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어휘로 판가를 나는 수능 등급
지문·발문·선지의 어휘 총망라 수록!

- ④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 ⑤ 근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만 해당된다.

4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 문제분석**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 정답찾기**
 - ㄴ. 위헌 법률 심사제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 제도 중 하나이다.
 - ㄷ.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가 합법적이지만 하면 독재 정치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 오답피하기**
 - ㄱ. 법률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반면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 ㄹ.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5 우리나라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 이해

- 문제분석** ㉠은 광역 의회이고, ㉡, ㉢은 광역 의회 의원이며, ㉣은 광역 자치 단체장이다.
- 정답찾기** ④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 의회에 제출한다. 지방 의회는 예산의 심의 및 확정을 통해서 지방 자치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
- 오답피하기**
 - ①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것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 ② 광역 의회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소선거구제, 단수 다수 대표제가 적용되며, 기초 의회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중·대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된다.
 - ③ 지방 자치 단체장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지방 의회 의원 중 비례 대표 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 문제분석** A, B는 (가), (다)에 들어갈 질문에 따라 각각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며, (나)에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공통된 특징에 해당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 정답찾기** ④ (가)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원화되어 있는가?'라면,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므로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있다.
- 오답피하기**
 - ① (가)가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가?'라면,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내각의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달려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 ② (다)가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가?'라면,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 ③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에서는 모두 의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 수 있으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 ⑤ (다)가 '국민의 직접 선거로 행정부 수반이 선출되는가?'라면,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7 자유권의 이해

- 문제분석** A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해당하는 자유권이다.
- 정답찾기** ④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하여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국가가 개인의 자기 결정의 영역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권리이다.
- 오답피하기**
 - 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청구권이다.
 - ②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는 사회권이다.
 - ③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이다.
 - ⑤ 국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이다.

8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 문제분석** A는 헌법 재판소, B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 법원이며, (가)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나)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 정답찾기** ① 헌법 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오답피하기**
 - ② 탄핵 심판은 법원이 아닌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 ③ 재판 당사자가 해당 법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어도 법원은 해당 법률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 있다.
 - ④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과 위헌 법률 심판이다.
 - ⑤ 헌법 소원 심판은 최종적인 구제 방법이므로 기각될 경우 다른 구제 방법은 없다. 또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만이 할 수 있다.

9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 이해

- 문제분석**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단은 정당이므로 A는 정당이며, B와 C는 (가)에 들어갈 질문에 따라 각각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 정답찾기** ⑤ 정당과 시민 단체는 공통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므로 (가)가 '집단의 특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가?'라면, B는 시민 단체, C는 이익 집단이다.
- 오답피하기**
 - ①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이므로 비당파성을 특징으로 하지는 않는다.
 - ②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정치 과정에서 환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 ③ B가 이익 집단이라면, C는 시민 단체이다. 이익 집단과 시민 단

체는 모두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④ B가 시민 단체라면, C는 이익 집단이다. 정치 참여 집단은 기본적으로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10 정치 참여 방법 이해

문제분석 시민들은 청원, 시민 단체 가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정답찾기 ㄱ. 국회는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만, 시민 단체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갑의 정치 참여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 방법에 해당하며, 을의 정치 참여 방법은 시민 단체를 통한 정치 참여 방법에 해당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 방법은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시공간적 제약이 작다.

오답피하기 ㄴ. 갑, 을과 같은 개인도 정치 참여 주체에 해당한다.

ㄷ. 을이 시민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시민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집단적 정치 참여에 해당한다.

11 가족 관계 이해

문제분석 을과 무의 혼인 후 무가 병을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면, 갑과 병의 친족 관계는 유지된다.

정답찾기 ④ 갑과 병의 친족 관계는 유지되므로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병은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정은 경우 상속 제1순위인 병이 있으므로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무는 병을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 병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②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성년의 경우 가정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입양 후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하는 것은 친양자 입양이다.

⑤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더라도 양부모 사망 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무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을, 병은 모두 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12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분석 (가)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 (나)는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 수정·보완된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정답찾기 ①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③ 경제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④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⑤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13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갑과 을은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병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정은 불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정답찾기 ④ 갑과 을은 2심 재판 결과 유죄를 선고받아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정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구속된 적이 없으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법원에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는 보석 제도로서,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을은 1심 재판 결과 징역, 금고와 같은 자유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이지, 무죄를 선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③ 병이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다.

⑤ 갑, 을, 병, 정은 모두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14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이해

문제분석 미성년자인 을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갑과 고가의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답찾기 ② 갑은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응답을 을이 아닌 병에게 요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을이 갑에게 오토바이 구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③ 계약 시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이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을이 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을과 병은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병은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15 불법 행위 이해

문제분석 갑이 ○○ 식당의 피용자이면 갑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을이 책임 무능력자라면 병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찾기 ㄱ. 갑이 피용자이면, 질문자는 갑에게 직접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을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면, 병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질문자는 병에게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갑이 사용자라 하더라도 갑이 직접 행한 불법 행위이므로 피해자는 갑에게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을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을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질문자는 을 또는 병에게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6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한 이해

문제분석 A는 안전 보장 이사회, B는 총회이다.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갑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을국만 반대하여 부결되었다는 것을 통해 을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병국에 대한 경제 제재안은 11개국이 찬성하고, 4개국이 반대하는데 가결되었다는 것을 통해 '4개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될 수 없다.

정답찾기 ㄱ. 을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지만, '4개국'은 모두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아니므로 '4개국'에 을국이 포함되지 않는다.

ㄴ. 총회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의 원칙으로 표결이 이루어진다.

ㄷ.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연합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오답피하기 ㄴ.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아닌 비상임 이사국은 2년의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된다.

17 근로 계약의 이해

문제분석 근로 계약 시 근로 시간, 휴일 근로 등 일부 내용은 연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8세 이상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정답찾기 ㄴ.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한다.

ㄷ.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야간 및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오답피하기 ㄱ.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 근로도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이므로 을이 연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 시간은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임금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연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8 범죄 및 형벌의 이해

문제분석 갑과 을은 모두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선고받았지만, 갑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정답찾기 ㄴ. 자유형 중 노역이 부과되는 형벌은 징역이다.

ㄷ. 갑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을은 치료 감호 처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명령, 치료 감호는 모두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대안적 형사 제재인 보안 처분 중 하나이다.

오답피하기 ㄱ. 갑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 유예는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와 달리 선고 유예는 선고 유예의 실효 없이 형 선고의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

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ㄴ. 범죄 성립 요건 중 위법 행위를 하였다는데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은 책임이다. 갑과 을은 모두 유죄의 선고를 받았으므로 법원은 갑과 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19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분석 A는 국제 관습법, B는 법의 일반 원칙, C는 조약이다.

정답찾기 ② 법의 일반 원칙은 국제 사회의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이 있다.

오답피하기 ① 일반적으로 성문화된 문서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조약이다.

③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④ 국제 관습법이 국내에 적용되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 선거 결과 분석

문제분석 갑국의 총의석수는 12석이며,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A당은 5석, B당은 1석, C당은 2석, D당은 3석, E당은 1석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개편안 적용 시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계
지역구 의석수(석)	5	0	1	0	0	6
정당 투표 득표율(%)	38	29	20	9	4	100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	2.28	1.74	1.2	0.54	0.24	6
비례 대표 의석수(석)	2	2	1	1	0	6
총의석수(석)	7	2	2	1	0	12
총의석률(%)	약 58.3	약 16.7	약 16.7	약 8.3	0	100

정답찾기 ④ D당의 현행 선거 결과 의석수는 3석이고, 개편안 적용 시 의석수는 1석이 된다. 따라서 D당은 현행보다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불리하다.

오답피하기 ① 갑국의 현행 지역구 선거의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이므로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한다.

② 현행 선거 결과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수는 5개인데, 개편안 적용 시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수는 4개로 감소한다.

③ 개편안 적용 시 B당과 C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이 각각 29%와 20%이고, 총의석률이 각각 약 16.7%이므로 총의석률이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낮다.

⑤ 현행 선거 결과 제1당인 A당의 의석수는 5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갑국이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 A당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없다. 반면 개편안 적용 시 A당의 의석수는 7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A당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1 ④	2 ②	3 ②	4 ⑤	5 ②
6 ④	7 ③	8 ⑤	9 ①	10 ③
11 ①	12 ④	13 ④	14 ⑤	15 ④
16 ③	17 ④	18 ③	19 ①	20 ③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이해

문제분석 갑의 관점은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이고, 을의 관점은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정답찾기 ④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가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오답짜기 ① 학급 내 생활 규칙의 제정을 정치로 보는 것은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②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과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 모두 대통령의 법률 공포를 정치로 본다.

③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은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⑤ 갑은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보고 있고, 을은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고 있다.

2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명확한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독재 정치를 옹호하는 논리로 악용되자,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당해야 함을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였다. 따라서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찾기 가. 위헌 법률 심사 제도는 법률이 그 상위 규범인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사법 기관이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입법부의 위헌 법률 제정에 대한 헌법 보장의 사법적 수단으로서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나.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오답짜기 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라.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자 한다.

3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소극적·방어적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 유형은 자유권이다. 따라서 A는 자유권이다.

정답찾기 ② 사회권과 청구권은 자유권과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오답짜기 ① 자유권은 구체적인 내용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③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고,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이다.

④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⑤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고,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된다. 실현 방안으로 고문 금지 및 진술 거부권 보장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A는 복지 국가의 원리, B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정답찾기 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자유 민주주의와 관련된다.

오답짜기 ①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② 국가가 경제 활동을 조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③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강조된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가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이다.

④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및 검열 금지는 복지 국가의 원리가 아니라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5 헌법 재판의 이해

문제분석 공직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던 갑이 해당 법률 조항 부분의 위헌 여부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 재판소에 직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A는 위헌 법률 심판, B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정답찾기 ②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조항 부분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아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였고,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오답짜기 ① 헌법 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항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유에 따르면, 선거의 공정과 평등을 위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③ 헌법 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으므로 해당 법률 조항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갑의 사건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갑은 무죄 선고를 받는다.

④ 위헌 법률 심판은 재판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제청 가능하다.

⑤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다.

6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이해

문제분석 교사가 두 사람은 옳게, 한 사람은 틀리게 말했다고 하였으므로 동시에 두 사람이 옳은 내용일 수 있는 것은 을과 병이다. 따라서 A는 국회, B는 헌법 재판소이다.

정답찾기 나. 감사원이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결과를 보고하면 국회가 이를 심사한다.

르. 국회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 재판소 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오답피하기 가. 우리나라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은 국무 회의이다.

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의 권한이다.

7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이해

문제분석 연립 내각이 형성되어 있고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갑국은 의원 내각제를,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을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찾기 ③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

오답피하기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물이 아니다.

②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④ 갑국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고 현재 연립 내각이 형성되어 있음을 통해 의회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나, 을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제시문을 통해서도 현재 의회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⑤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제와 달리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8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이해

문제분석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중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 의회이고,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따라서 A는 지방 의회, B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정답찾기 ⑤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은 중앙 정부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오답피하기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② 지방 자치 단체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권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다.

③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관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④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 의회이다.

9 정치 참여 집단의 이해

문제분석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정당과 시민 단체이고, 정권 획득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이다. 따라서 A는 이익 집단, B는 정당, C는 시민 단체이다.

정답찾기 가. 이익 집단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표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정부 정책을 감시하거나 견제하기도 하면서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나. 이익 집단이나 시민 단체와 달리 정당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활동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 정치적 책임을 진다.

오답피하기 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당이다.

르.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10 정치 과정의 이해

문제분석 정치 과정 중 '요구'와 '지지'로 구성되며 개인이나 집단이 정책 결정 기구를 움직여 정책 수립이나 시행을 이끌어 내는 과정은 투입이다. 따라서 A는 투입이다.

정답찾기 나. 정치 주체 중 하나인 시민 단체가 정책 결정 기구인 입법부에 입법을 촉구하는 것은 투입의 사례로 적절하다.

디. 노동계와 경영계가 기자 회견을 통해 자신들이 마련한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최저 임금을 결정할 정부에 대해 요구 사항을 알리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투입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가. 정부의 도심 수해 방지 종합 대책 발표는 산출의 사례이다.

르. 공공 기관 이전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가 공사에 착수한 것은 산출의 사례이다.

11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분석 오늘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따라서 A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정답찾기 ①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상대방과 자율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원칙이다.

오답피하기 ②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③ 계약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④ 개인의 소유권이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임을 강조하는 원칙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⑤ 자신의 행동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12 선거 제도 사례의 분석

문제분석 현행 제도는 의회 의원을 4개의 선거구마다 2명씩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개편안 중 <1안>은 기존의 4개 선거구를 각각 두 개씩으로 나누어 선거구당 1명을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2안>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8명의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 현재

구분	A당	B당	C당	D당
(가) 선거구	당선	-	당선	-
(나) 선거구	당선	당선	-	-
(다) 선거구	당선	당선	-	-
(라) 선거구	당선	당선	-	-
총의석수(석)	4	3	1	0
의석률(%)	50	37.5	12.5	0
득표율(%)	40	25	20	15

• 개편안으로 <1안> 적용 시

구분	A당	B당	C당	D당
(가)-1 선거구	당선	-	-	-
(가)-2 선거구	당선	-	-	-
(나)-1 선거구	당선	-	-	-
(나)-2 선거구	당선	-	-	-
(다)-1 선거구	-	당선	-	-
(다)-2 선거구	-	당선	-	-
(라)-1 선거구	당선	-	-	-
(라)-2 선거구	당선	-	-	-
총의석수(석)	6	2	0	0
의석률(%)	75	25	0	0
득표율(%)	40	25	20	15

• 개편안으로 <2안> 적용 시

구분	A당	B당	C당	D당
득표율(%)	40	25	20	15
득표율×8	3.2	2	1.6	1.2
총의석수(석)	3	2	2	1
의석률(%)	37.5	25	25	12.5

정답찾기 ④ <2안> 적용 시 현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D당이 의석을 1석 확보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1안>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유권자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중·대 선거구제이다.

② <1안> 적용 시 기존의 (가) 선거구에서 C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 기존의 (나) 선거구에서 B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 기존의 (다) 선거구에서 A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 기존의 (라) 선거구에서 B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는 현재와 달리 사표가 된다.

③ 현재 과대 대표된 정당은 A당과 B당 2개이고, <2안> 적용 시 과대 대표되는 정당은 C당 1개이다.

⑤ 현재 의석수가 4석인 A당은 <1안> 적용 시 6석, <2안> 적용 시 3석을 확보할 수 있고, 현재 의석수가 3석인 B당은 <1안> 적용 시 2석, <2안> 적용 시 2석을 확보할 수 있다.

13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문제분석 고등학생 갑(17세)은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므로 법률 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 행위도 일단 유효하지만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권리가 인정된다.

정답찾기 ④ 갑이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을을 속였다면 갑이나 갑의 부모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가)의 경우 갑의 부모뿐만 아니라 갑도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가)의 경우 을은 갑이 아니라 갑의 부모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③ 갑이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을을 속인 경우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배제되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⑤ 을이 갑의 부모가 추인하기 전에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경우이다.

14 특수 불법 행위의 이해

문제분석 첫 번째 사례에서 갑은 병에 대하여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질 수 있다. 두 번째 사례에서 손님 C에 대하여 종업원 B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사장 A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찾기 ⑤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오답피하기 ① 동물의 점유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다. 만약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②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과 무관하다.

③ 불법 행위는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성립할 수 있다.

④ 사용자의 배상 책임은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가 불법 행위 책임을 질 때 성립할 수 있다.

15 혼인, 이혼, 입양, 상속의 이해

문제분석 피상속인인 갑의 사망 시 갑과 을은 이혼하여 친족 관계가 소멸된 상태였고, 갑의 직계 비속으로서 법정 상속 1순위인 A, 갑의 직계 존속으로서 법정 상속 2순위인 병, 갑의 형제자매로서 법정 상속 3순위인 정이 있었다.

정답찾기 ④ 피상속인인 갑에 대하여 갑과 A의 친자 관계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A가 법정 상속 1순위가 되므로 법정 상속 2순위인 병은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을은 A에 대한 친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갑과 친족 관계가 소멸된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인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② 피상속인인 갑의 재산에 대한 을의 상속 여부는 갑과 을이 이혼으로 친족 관계가 소멸된 상태인가가 영향을 준다. 갑과 을이 어떤 유형의 이혼을 하였는가는 상속 여부와 관련이 없다.

③ 피상속인인 갑에 대하여 법정 상속 2순위인 병은 갑과 을의 이혼이 법적으로 유효한가가 아니라 갑과 A의 친자 관계가 법적으로 유효한가가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이다. 법정 상속 1순위가 없다면 법정 상속 2순위인 자는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된다.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무는 법정 상속 2순위인 자의 상속 가능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피상속인인 갑에 대하여 법정 상속 3순위인 정은 A와 입양 전 친족 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므로 갑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16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이해

문제분석 헌법 재판소의 결정문에서 '부정 청탁', '사회 상규'라는 용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어 해당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의 A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A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이다.

정답찾기 ③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답파헤기 ①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②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성문 법률주의로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⑤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17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가)~(라)를 통해 을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다는 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는 점, 무죄 판결 확정으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④ 피의자일 때 미결 구금되었던 을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구금으로 발생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오답파헤기 ① 피해자인 갑의 고소에 의해 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됨으로써 을은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②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면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을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를 거치게 되는 것이 아니다.

③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을이 1심 판결 후 항소하여 1심 판결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

은 계속 적용된다.

⑤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구속 적부 심사 청구가 있었다면 검사의 기소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피의자는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된다.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분석 신문 기사의 내용을 통해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갖는 A는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법을 적용한 재판으로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B는 국제 사법 재판소임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③ 국제 사법 재판소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오답파헤기 ①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은 총회이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②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사 결정 방식에는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힘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 실질 사항의 경우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개인 간의 분쟁은 관할하지 않는다.

⑤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9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이해

문제분석 국가 간의 권력관계나 강대국의 국익에 따라 조약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표현 등을 통해 제시문은 국제 관계를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ㄱ. 현실주의적 관점은 홉스가 언급한 자연 상태의 모습과 같이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상태라고 본다.

ㄴ.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의 기본 전제이다.

오답파헤기 ㄷ.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가들이 국제 기구를 통해 협력하며 국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ㄹ. 자유주의적 관점은 보편적 선(善)의 관점에서 국제법이나 국제 기구를 통해 개별 국가의 이익을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20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근로 계약서는 사용자 A와 연소 근로자 B 간에 체결된 근로 계약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 내용 중에는 근로 기준법과 최저 임금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찾기 ③ 근로 계약 시 임금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였더라도 법정 최저 임금 미만인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정 최저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오답파헤기 ①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내용이 있더라도 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한 내용만 무효가 된다.

② 근로자 B는 17세인 고등학생이므로 근로를 하기 위해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 인허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근로 시간의 경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휴게 시간과 연장 근로 시간을 고려할 때 1일 근로 시간이 9시간이므로 이는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다.

⑤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면 되므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는 계약 내용은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실전 모의고사 4회

본문 117~122쪽

1 ②	2 ⑤	3 ③	4 ①	5 ④
6 ①	7 ④	8 ④	9 ①	10 ⑤
11 ⑤	12 ⑤	13 ⑤	14 ⑤	15 ④
16 ⑤	17 ④	18 ⑤	19 ①	20 ④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야구 동호회 회원들이 회비 사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반면에 '국회의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권 행사'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모두 정치로 본다.

정답찾기 ㄱ. '국회의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권 행사'는 국가 차원에서 나타나는 활동이므로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모두 정치로 본다.

ㄷ. (가)에 '갑과 달리 을'이 들어가면 갑의 관점인 A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을의 관점인 B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

오답짜기 ㄴ. (가)에 '을과 달리 갑'이 들어가면 갑의 관점인 A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을의 관점인 B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ㄹ.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로 보므로 A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B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가)에 '갑과 달리 을'은 들어갈 수 없다.

2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A는 실질적 법치주의이고, B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정답찾기 ⑤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오답짜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에 'A, B'가 들어갈 수 있다.

②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하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나 목적을 문제 삼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④ 실질적 법치주의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강조한다.

수능특강 연계 기출

수능특강과의 완벽한 시너지
 오개념 위험이 높은 변형 문제는 NO!
 보장된 고퀄리티 기출문제 OK!

3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소극적 권리는 자유권이고,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이며,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따라서 A는 청구권, B는 사회권, C는 자유권, D는 참정권이다.

정답찾기 ③ 자유권은 사회권과 달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오답피하기 ① 국민 투표권은 참정권에 해당한다.

② 청구권, 사회권은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④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⑤ 자유권은 청구권, 사회권, 참정권과 달리 천부 인권적 성격을 갖는 권리이다.

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이 실현 방안이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가 관련 헌법 내용인 것은 국민 주권주의이다. 또한 '사회권 보장'이 실현 방안인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찾기 ㄱ. '국민 투표제 실시'는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ㄴ. '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복지 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ㄷ.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는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와 관련한 헌법 내용이다.

ㄹ.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5 전형적인 정부 형태 이해

문제분석 T+2대에 야당의 의석 점유율이 60%이므로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다. 여소야대 현상은 의원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에서 나타난다. 갑국의 정부 형태는 1회 변경되었으므로 T대, T+1대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고, T+2대, T+3대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정답찾기 ㄴ. T+2대에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으므로 T+3대에는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50%를 초과하는 의석 점유율이 ㉠에 들어갈 수 없다.

ㄹ.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제에서와 달리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인정된다.

오답피하기 ㄱ. T대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B당의 의석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했다면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다면 B당과 연립 내각을 구성한 정당(들)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의석 점유율 합이 ㉠에 들어가야 한다.

ㄷ. 대통령제에서와 달리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이 인정된다.

6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 국가 기관 중 A는 국회, B는 대법원, C는 대통령, D는 국무총리, E는 감사원이다.

정답찾기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심사권은 국회가 갖는다.

오답피하기 ② 법률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된다.

③ 탄핵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④ 대통령은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국회 의장은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⑤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갖는다.

7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분석 갑은 재판 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으므로 이후에 위헌 법률 심판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을은 재판 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병은 재판 중은 아니었지만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정답찾기 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ㄹ. 을은 재판 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병은 재판 중은 아니었지만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을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병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오답피하기 ㄱ.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9명이며,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하여 9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ㄷ.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

8 정치 참여 집단 이해

문제분석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정당과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이익 집단은 정당, 시민 단체와 달리 공익보다 특수한 이익의 실현을 중시한다. 따라서 A는 시민 단체, B는 이익 집단, C는 정당이다.

정답찾기 ④ 정당은 시민 단체, 이익 집단과 달리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피하기 ①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므로 ㉠을 해당 내용으로 변경해도 표는 성립한다.

② 정당은 시민 단체, 이익 집단과 달리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을 해당 내용으로 변경하면 표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시민 단체는 이익 집단, 정당과 달리 비당파성, 비영리성을 모두 추구하므로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가면 (나)에 '이익 집단이 아닌 시민 단체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임.'이 들어갈 수 있다.

⑤ 정치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평가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환류라고 하며,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은 모두 환류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9 선거 결과 분석

문제분석 주어진 조건을 토대로 한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현행	정당 득표율(%)	38	33	15	8	6
	지역구 의석률(%)	30	35	20	10	5
	지역구 의석수(석)	72	84	48	24	12
	비례 대표 의석수(석)	23	20	9	5	3
	합계(석)	95	104	57	29	15
	의석률(%)	약 31.7	약 34.7	19	약 9.7	5
〈1안〉	지역구 의석률(%)	35	25	25	5	10
	지역구 의석수(석)	84	60	60	12	24
	비례 대표 의석수(석)	23	20	9	5	3
	합계(석)	107	80	69	17	27
	의석률(%)	약 35.7	약 26.7	23	약 5.7	9
〈2안〉	할당 의석(석)	114	99	45	24	18
	지역구 의석수(석)	72	84	48	24	12
	비례 대표 의석수(석)	42	15	0	0	6
	합계(석)	114	99	48	24	18
	의석률(%)	약 37.6	약 32.7	약 15.8	약 7.9	약 5.9

정답찾기 ① 현행에서 정당 득표율에 비해 과대 대표된 정당은 B당, C당, D당이다.

오답피하기 ② 현행에서 A당과 B당의 의석률은 각각 약 31.7%, 약 34.7%이고, 〈1안〉에서 A당과 B당의 의석률은 각각 약 35.7%, 약 26.7%이다. 따라서 현행에 비해 〈1안〉에서 A당과 달리 B당의 의석률은 감소한다.

③ 〈2안〉에서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정당은 C당과 D당뿐이다.

④ 현행, 〈1안〉, 〈2안〉 중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격차는 〈2안〉이 가장 작다.

⑤ 현행 지역구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이고, 〈1안〉의 지역구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이다. 각 정당은 선거구당 1명씩만 공천할 수 있으므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1안〉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의 지역구 의석률은 50%가 된다. 따라서 현행 지역구 선거 제도와 달리 〈1안〉의 지역구 선거 제도에서는 지역구 의석률이 50%를 초과하는 정당이 나타날 수 없다.

10 혼인, 이혼, 입양의 이해

문제분석 갑과 을은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이혼하였으므로 협의상 이혼을 한 것이고, 정과 재혼 전의 배우자는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였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한 것이다.

정답찾기 ⑤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인 경우에 가능하며, 일반 입양은 성인인 경우에도 입양이 가능하다.

오답피하기 ①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혼은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②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하지만 사례에서는 친생부모인 갑이 정과 재혼을 한 상태에서 정이 A를 친양자로 입양한 것이므로 갑과 A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③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을과 무는 법률혼 상태에서 D를 낳았으므로 D는 혼인 중 출생자이다.

④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1 상속 제도 이해

문제분석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되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법정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며,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 공동 상속인이 될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는다. 사례에서 갑이 사망하면 정, A, B가 법정 상속을 받고, 을이 사망하면 무, B, D가 법정 상속을 받는다.

정답찾기 ⑤ ㉠에 '7억'이 들어가면 정은 3억 원, A는 2억 원, B는 2억 원을 상속받으며, ㉡에 '14억'이 들어가면 무는 6억 원, B는 4억 원, D는 4억 원을 상속받는다. 따라서 B의 법정 상속액은 총 6억 원이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A의 법정 상속액이 1억 원이면 정, B의 법정 상속액은 1억 5천만 원, B의 법정 상속액은 1억 원이다. 따라서 ㉠은 3억 5천만 원이다.

② C는 갑이 입양 절차를 통해 입양을 하지 않았으므로 갑과 C와의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C는 법정 상속을 받지 못한다. ㉠에 '18억'이 들어가면 정, A, B가 법정 상속 비율(정 : A : B = 1.5 : 1 : 1)대로 상속받는다.

③ ㉡에 '10억'이 들어가면 무는 약 4억 2천 8백 6십만 원을 상속받고, B와 D의 법정 상속액 합은 약 5억 7천 1백 4십만 원이다. 따라서 무의 법정 상속액은 다른 법정 상속액의 합보다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적다.

④ (가)의 법정 상속권자는 정, A, B이고, (나)의 법정 상속권자는 무, B, D이다.

12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 이해

문제분석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중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되는 A는 지방 의회이고,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는 B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정답찾기 ⑤ 기초 자치 단체, 광역 자치 단체의 지역구 의원은 모두 주민 소환제의 대상이 되지만, 기초 자치 단체, 광역 자치 단체의 비례 대표 의원은 모두 주민 소환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지방 의회는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을 갖고, 지방 자치 단체장은 규칙 제정권을 갖는다.

②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이고,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이다.

③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은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④ 광역 자치 단체의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선출되고, 기초 자치 단체의 지역구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로 선출된다.

13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문제분석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 행위를 해야 한다. 만약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 행위를 하였다면,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거래 상대방이 믿게 한 후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찾기 나. 갑과 병이 각각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갑의 부모, 병의 부모는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을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갑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따라서 A는 을의 부모와 달리 갑의 부모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르. 정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속임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정이 체결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며, 병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A는 정은 부모와 달리 병의 부모에게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가. 을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을과 정은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4 특수 불법 행위 이해

문제분석 음식점 사장 B에게 제기된 2개의 소송 중 첫 번째 소송은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소송은 특수 불법 행위 중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에 관련된 것이다.

정답찾기 ⑤ B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특수 불법 행위 중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종업원인 C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해야 사용자인 B의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③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④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고 공작물 등의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15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분석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가)는 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 여부, (나)는 책임 조각 사유 해당 여부, (다)는 범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 여부와 관련된다.

정답찾기 을. 심신 상실자의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되어 범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책임은 위법 행위를 하였다는 데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

정. 위법성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판단하고, 책임은 위법 행위에 대해 판단한다. 따라서 (가), (나)는 (다)와 달리 A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된 상황이다.

오답피하기 갑. 법령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병.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범죄 성립 요건 중 (나)의 법적 쟁점과 같다.

16 형사 절차 이해

문제분석 갑, 을, 병 모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였는데 병만 구속 수사가 계속된 것은 법원에서 병의 청구만 기각한 것이다. 검사는 갑, 병은 기소하였지만, 을은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는 기소 유예 처분을 하였다.

정답찾기 ⑤ 기소 유예 처분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구속 영장이 필요하다.

②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③ 갑, 병은 기소되었으므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되고, 을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을에 대한 형사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④ 집행 유예는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17 불법 행위와 소년 사건 이해

문제분석 미성년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으면 피해자는 미성년자 및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 책임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는 미성년자에게는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2세와 16세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16세는 12세와 달리 형벌 및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듬 I은 과제 1의 첫 번째 법적 판단이 옳고, 모듬 II는 과제 1의 두 번째 법적 판단이 옳다.

정답찾기 가. 갑, 을 모두에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나)에 들어가면 모듬 II의 나머지 3개 내용이 옳다. 이 경우 모듬 II의 과제 2에서 두 번째 평가 내용도 옳게 되므로 (가)에 옳은 법적 판단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나)의 내용이 옳지 않으므로 모듬 I의 과제 2에서 첫 번째 평가 내용이 옳게 되어 (나)에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

나. 갑은 을과 달리 경찰서장이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나)에 들어가면 모듬 II는 과제 1의 2개 내용이 모두 옳다. ㉠, ㉡에 모두 '법적 판단 내용이 옳지 않음.'이 들어가면 모듬 I은 과제 1의 2개 내용이 모두 옳고, 과제 2의 2개 내용이 모두 옳지 않게 된다. 이 경우 모듬 I의 점수는 2점이 되므로 해당 내용은 ㉠, ㉡ 모두에 들어갈 수 있다.

다. ㉠에 '법적 판단 내용이 옳음.'이 들어가면 모듬 I의 과제 1에서

첫 번째 내용과 과제 2의 두 번째 내용이 옳게 된다. 이 경우 (가)의 법적 판단 내용은 틀려야 하므로 이에 대한 모둠 II의 평가 내용도 틀리게 된다. 따라서 ㉠에는 옳은 평가 내용인 '법적 판단 내용이 옳음.'이 들어가야 한다.

오답피하기 ㉡. ㉠에 '법적 판단 내용이 옳지 않음.'이 들어가면 해당 내용은 틀리므로 모둠 II의 나머지 3개 내용은 모두 옳다. 따라서 (가)에는 옳은 법적 판단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을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폭행 피해자 측은 을의 감독 의무자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분석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은 총회이므로 갑이 옳게 답했다면 갑, 정이 옳게 답한 학생이 되고 A는 총회, B는 국제 사법 재판소, C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된다. 갑, 을이 모두 옳게 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 정이 옳게 답했고, 이 경우 A는 안전 보장 이사회, B는 국제 사법 재판소, C는 총회이다.

정답찾기 ㉢. 옳게 답한 학생이 '갑, 정'이면 C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는 의사 결정 시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의 경우에는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는 표결 방식에 힘의 논리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 옳게 답한 학생이 '병, 정'이면 A는 안전 보장 이사회, B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에 해당하는 학생과 상관없이 B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적 관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에 해당할 수 있는 학생은 '갑, 정' 또는 '병, 정'이다.

19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분석 (가)에는 A, B의 특징에는 해당하지만 C의 특징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구분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하고, (나)에는 B의 특징에는 해당하지만 A, C의 특징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구분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찾기 ① '기후 변화에 대한 파리 협정'은 조약의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 주요 조약에 대한 체결권은 대통령이 갖고, 체결 동의권은 국회가 갖는다.

오답피하기 ②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은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의 준거로 활용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③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모두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C는 조약이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의 사례이다.

④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보편적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므로 해당 질문이 (나)에 들어가면, B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주로 문서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조약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⑤ 국내 문제 불간섭은 국제 관습법의 사례이고, 조약은 국제기구가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A는 법의 일반 원칙, B는 조약, C는 국제 관습법이다. 국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 규범으로 인정된 것은 국제 관습법이다.

20 근로자의 권리 구제 이해

문제분석 갑은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을은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는 모두 '지방 노동 위원회 → 중앙 노동 위원회 → 행정 법원의 절차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부당 해고는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찾기 ④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절차에서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 노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지방 노동 위원회가 갑에 대한 해고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사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갑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 회사의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③ 을의 경우 ○○ 회사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중앙 노동 위원회는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⑤ 갑과 을은 모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바쁜 수험생을 위한 가장 빠른 수능완성 학습법
수능완성에 수록된 지문에 대한 철저한 분석

1 ③	2 ⑤	3 ⑤	4 ④	5 ③
6 ④	7 ④	8 ④	9 ①	10 ⑤
11 ②	12 ③	13 ③	14 ④	15 ④
16 ⑤	17 ②	18 ③	19 ⑤	20 ③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갑은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보고 있으므로 정치를 넓은 의미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을은 정치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는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라고 보고 있으므로 정치를 좁은 의미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정답찾기 ③ 좁은 의미로 정치를 보는 관점에 비해 넓은 의미로 정치를 보는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오답피하기** ① '학급에서 특색 활동 운영 방식을 논의하여 결정하는 활동'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므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② '국회에서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는 입법 활동'은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모두에 해당하므로 (나)에 들어갈 수 없다.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보는 관점은 국가의 정치 현상과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⑤ 넓은 의미로 정치를 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보는 관점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2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갑은 집회의 자유, 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았다. 갑, 을이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 유형은 자유권이다.

정답찾기 ⑤ 자유권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 오답피하기** ①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②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이다.
 ③ 사회권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이다.
 ④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3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분석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찾기 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②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형식과 절차만을 강조한다.
 ③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 제도는 위헌 법률 심사 제도이다. 위헌 법률 심사 제도는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이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가 합법적이지만 하면 독재 체제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4 우리나라의 헌법 기관 이해

문제분석 A는 국회, B는 감사원이다.

정답찾기 ④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한다.

- 오답피하기** ① 국무총리는 국무 위원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 법관,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③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⑤ 국회는 국정을 감시·통제하는 국정 감사권을 통해 정부를 견제한다.

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분석 갑은 복지 국가의 원리에 대해 발표한 것이고, 을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해 발표한 것이다. 교사가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해 1명만 옳은 내용을 발표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조건에 따라 A를 판단해야 한다.

정답찾기 ③ A가 평화 통일 지향이라면, 옳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은 병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옳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이 갑이라면, A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 ② 옳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이 을이라면, A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④ A가 복지 국가의 원리라면, 옳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은 갑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⑤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가면, 옳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은 을이다.

6 선거 제도 및 결과에 대한 분석

문제분석 갑국의 현행 의회 의원 선거구 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회 의원을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며, 개편안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 대표제이다. 현행 선거제도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선거 결과는 표와 같다.

(단위: 석, %)

구분	A당	B당	C당	D당	계	
정당 득표율	40	45	6	9	100	
현행 선거제도	의석률	30	55	15	0	100
	의석수	90	165	45	0	300
개편안	의석률	40	45	6	9	100
	의석수	120	135	18	27	300

정답찾기 ④ 현행 선거 제도 적용 시보다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A당의 의석수가 90석에서 120석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다.

오답피하기 ① 현행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이다. 선거구 내 당선자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는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이다.

② 정당 지지율과 의석률 간의 격차가 클 때 과대 대표 또는 과소 대표되었다고 한다. 정당 득표율을 지지율로 간주하여 의석률이 득표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낮은) 경우 과대(과소) 대표되었다고 한다. 현행 선거 제도에서 B당, C당의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의 의사는 과대 대표되었다.

③ 봉쇄 조항은 비례 대표제에서 일정 비율의 정당 득표율 또는 지역구 의석수에 미치지 못한 정당을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현행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이므로 현행 선거 제도에서 D당은 봉쇄 조항 때문에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 소속 후보자가 최다 득표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것이다.

⑤ 현행 선거 제도에서 B당의 의석률은 55%이므로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에서 B당은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지만,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받으므로 의석률이 45%인 B당은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없다.

7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 이해

문제분석 A는 시민 단체, B는 정당, C는 이익 집단이다.

정답찾기 ④ 시민 단체, 정당은 이익 집단과 달리 공익 실현을 중시한다.

오답짜기 ①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② 정당과 시민 단체는 정치 참여 집단으로 정치적 중립을 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정당은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며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⑤ 시민 단체, 정당, 이익 집단은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8 정부 형태의 특징 비교

문제분석 답안의 점수가 2점이므로 세 가지 서술 중 두 가지 서술이 옳은 내용이다. 답안에서 의회 의원이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다는 서술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진다는 서술이 옳은 내용이며, 이를 통해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임을 알 수 있다.

정답찾기 ④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오답짜기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의회가 구성되면 의회에서 총리가 선출되어 내각이 구성된다.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 선거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별도로 실시된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대통령제에서는 의원 내각제와 달리 의회가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⑤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에서는 모두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로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한다.

9 지방 자치 단체의 이해

문제분석 자료는 주민 투표법의 일부이다. 주민 투표법은 법률에 해당하며, 주민 투표는 주민 참여 제도의 하나이다.

정답찾기 ㄱ. 주민 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에 해당한다.

ㄴ.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으로 법령 및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오답짜기 ㄷ. 주민 투표법은 법률이다. 법률의 제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ㄹ.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10 선거 제도 및 결과에 대한 분석

문제분석 갑국의 현행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에 해당한다. <상황 2> 개편안은 중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에 해당한다. 각 선거구별 득표수는 다음과 같다.

<현행>

(단위: 표)

구분	A당	B당	C당	D당
선거구1	25	15	35	25
선거구2	80	40	60	20
선거구3	50	5	10	35
선거구4	30	100	20	50
선거구5	30	10	10	50
선거구6	20	20	120	40
선거구7	15	10	55	20
선거구8	60	20	80	40

<상황 2>

(단위: 표)

구분	A당	B당	C당	D당
선거구1-2	105	55	95	45
선거구3-4	80	105	30	85
선거구5-6	50	30	130	90
선거구7-8	75	30	135	60

각 정당의 의석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석)

구분	정당	A	B	C	D	합계
<상황 2>	현행	2	1	4	1	8
	의석수	2	1	3	2	8

정답찾기 ㄷ. <상황 2>의 경우 선거구별 인구가 300명으로 동일하므로 선거구 간 인구 편차는 없어졌다. 하지만 한 선거구에서 2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므로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ㄹ. <상황 2>에서 <상황 1>인 경우 A당과 B당 소속 의원 수가 합쳐서 3석이므로 A당과 B당이 반대하더라도 의회 의결 시 재적 의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 개정안은 가결될 수 있다.

○답짜기 ㄱ. 현행 선거 제도에서 <상황 1>인 경우 C당 소속 의원의 수는 4석이므로 C당 소속 의원들만 찬성한다면 의회 의결 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 개정안은 가결될 수 없다.

ㄴ. <상황 2>의 개편안에 대해 D당은 의석수가 1석 증가하기 때문에 지지하지만, C당은 의석수가 1석 감소하여 반대할 것이다.

11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자료는 갑과 미성년자인 A의 노트북 매매 계약에 대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정답찾기 ② A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갑과 계약을 한 경우, 갑이 A에게 계약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 당시 A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이다.

○답짜기 ① 갑이 계약 당시 A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갑은 A에게 계약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③ 계약 당시 A가 의사 무능력자였다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계약 당시 A가 속임수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믿게 한 경우 A와 A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갑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⑤ 계약 이후 A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는 경우 매매 계약이 유효하므로 갑은 A에게 계약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12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분석 (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나)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정답찾기 ③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만이 강조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현실적인 불평등 관계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즉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한 계약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답짜기 ① 소유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② 국가가 개인 소유의 재산에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④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⑤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 내용의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자율적인 계약 체결을 바탕으로 하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우리나라 민법에서 폐기된 것은 아니다.

13 특수 불법 행위 이해

문제분석 을이 식료품 배달을 위해 고용한 병이 식료품 배달을 하다가 B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을은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갑이 소유한 ○○ 건물을 임차한 을이 점유 중이므로 을이 매장 천장

이 무너짐으로 인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을이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을 진다.

정답찾기 ㄴ. 사용자인 을이 피용자인 병에 대한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을은 사용자로서 B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을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을이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갑은 C에게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답짜기 ㄱ. 을이 B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용자인 을이 고용한 병이 B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ㄷ. A와 을 사이에 식료품 주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식료품이 배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 병이 아닌 을이 A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14 가족 관계 이해

문제분석 갑과 을은 협의상 이혼을 하였고, 갑과 을의 자녀 A를 을이 키우기로 하였으므로 갑은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을과 병은 법률혼을 하고 병이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 A는 을과 병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정답찾기 ④ 병의 친양자인 A는 병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므로 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답짜기 ①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시키는 이혼은 재판상 이혼이다.

②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의 면접 교섭권은 청구 절차 없이 인정된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갑은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③ 을과 병은 법률혼을 하였고 병은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 갑과 A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지만, 을과 A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⑤ 병이 사망하면 A에 대한 친권은 을에게 있다.

15 헌법 재판 판례 분석

문제분석 제시문에서 갑은 재판을 받고 있는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 재판소에 직접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정답찾기 ④ 죄형 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성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는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한다. 마라케시 협정은 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성문의 법률에 국내법의 개정 없이도 마라케시 협정이 포함된다.

○답짜기 ① 위헌 법률 심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② 갑은 헌법 재판소에 직접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③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법 상호 간 관계에서 최고 규범인 헌법보다 하위에 있다고 본다.

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였고, 헌법 재판소는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를 볼 때 ○○법 □□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두 국가 기관의 판단이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6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분석 갑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병의 행위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찾기 ⑤ 법원은 갑의 행위와 병의 행위는 각각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병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오답짜기 ① 법원은 갑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② 법원은 병의 행위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③ 치료 감호는 형벌의 대안적 제재 수단인 보안 처분에 해당하며, 유죄인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병에게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17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분석 (가)는 검사의 기소 유예 결정이고, (나)는 법원의 판결이다.

정답찾기 ② 기소 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따라서 검사는 갑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오답짜기 ① 기소 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므로 갑은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

③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을은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다.

④ 선고 유예는 선고 유예의 실효 없이 유예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을은 2심 법원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 유예는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⑤ 기소 유예는 검사가 결정하며, 판결은 법관이 선고한다.

18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분석 갑의 관점은 국제기구나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을의 관점은 국력 증강, 공동의 적에 대한 동맹을 통해 국가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정답찾기 나. 현실주의적 관점은 냉전 체제에서의 군비 경쟁을 설명

하기 용이하다.

ㄷ. 자유주의적 관점은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 유지를 강조한다.

오답짜기 가.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본다.

ㄹ.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19 근로자의 권리 구제 이해

문제분석 자료는 근로자 갑, 을, 병의 노동권 보장 상황을 나타낸다.

정답찾기 ⑤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근로 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 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는 근로 감독관을 두고 있다. 근로 감독관은 노동법 위반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를 바로잡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 고용 노동 관서 또는 근로 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을과 병은 근로 감독관에게 임금 체불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오답짜기 ①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갑이 체결한 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최저 임금 미만으로 시간당 임금을 정한 부분이 무효이다.

② 을이 속한 노동조합과 을은 모두 을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노동 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1주간의 근로 시간은 최대 40시간이므로 40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에 대해 근로 기준법은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병의 연장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 계약 시 정한 통상 임금 외에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근로 3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이다. 을은 갑과 달리 부당 노동 행위를 경험하였다.

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에 대한 이해

문제분석 A는 총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정답찾기 ③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오답짜기 ①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은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②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인 갑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총회와는 달리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는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가지는데, 이러한 표결 방식은 힘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⑤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의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 이사국은 총회에서 매년 5개국씩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